

# 미국과 중국의 대북 행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연구책임자 | 박형중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KINU

통일연구원



# 미국과 중국의 대북 행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연구책임자 | 박형중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KINU

통일연구원

미국과 중국의 대북 핵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인 쇄 2005년 12월

발 행 2005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북한연구실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887)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5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가 격 5,000원

© 통일연구원, 2005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무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미국과 중국의 대북 핵정책과 한반도 구상, 그리고 한국의 정책공간 / 박형중  
연구책임. — 서울 : 통일연구원, 2005  
p. ; cm. — (연구총서 ; 05-23)

참고문헌수록

ISBN 89-8479-327-2 93340 : ₩5,000

349.9-KDC4

327.17-DDC21

CIP2005002886

미국과 중국의 대북 핵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목 차

I. 서론 .....	1
II. 미국의 대북 핵정책과 한반도 구상 .....	11
1. 미국의 대북 핵정책 .....	13
2. 미국의 한반도 구상: 핵문제와 그 이후 .....	31
III. 중국의 대북 핵정책과 한반도 구상 .....	39
1. 2차 핵위기와 중국의 정책 .....	41
2. 중국의 한반도 구상 .....	52
IV. 한국 대북정책의 동맹게임과 흥정력 .....	57
1.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북핵 해결론’ .....	60
2. 한국 대북정책의 동맹게임과 적대게임 .....	64
3. 대북정책 동맹게임내 한국정부의 흥정력 .....	75
V. 결론: 핵위기와 그 이후의 한·미동맹과 중국 .....	83
참고문헌 .....	93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00

## 표 목 차

<표 IV-1> 동맹게임과 적대게임 안보딜레마의 혼합 .....	67
<표 IV-2> 동맹 흥정력의 요소들에 대한 점수 부여 .....	80

I

서론



남북한 및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학습되어야 하는 상식적 명제 중의 하나는 “통일문제는 민족 내부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라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통일부가 펴낸 2005 통일교육 지침서(학교용)은 “우리와 주변국가의 관심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바라고 있는 점에서는 일치하나, 통일의 미래상과 관련해서는 나라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하면서, “주변국의 한반도에 대한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sup>1</sup>고 쓰고 있다. 아울러 이 책은 “남북관계를 우리 입장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국민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적극적인 외교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이러한 상식적이지만 추상적인 명제를 2002년 10월 이후 전개되고 있는 2차 북한핵문제 처리 과정과 관련하여, 그리고 가장 영향력 있는 행위자인 미국과 중국의 정책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우선적으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1차 핵문제 해결과정과 2차 핵문제 해결과정의 구조적 차이이다. 1990년대 초 중반의 1차 핵문제는 대체로 미국과 북한 간의 양자 협상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고 해결되었다. 1차 핵위기 시 중국은 미·북 주도로 진행되는 협상에서 사실상 방관자에 불과했고, 한국은 장외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야 했다.<sup>2</sup> 그러나 2차 핵문제 해결은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및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가장 주목되는 것이 몇 가지 있다. 첫째, 미국이 북한핵

<sup>1</sup> <[www.uniedu.go.kr/dataroom/index.jsp?send=book/2005/book19/book19.html](http://www.uniedu.go.kr/dataroom/index.jsp?send=book/2005/book19/book19.html) (검색일: 2005. 9. 23)>.

<sup>2</sup> Joel S. Witt 외, 북한핵위기의 전말: 벼랑끝의 북미협상 (서울: 모음북스, 2005) 참조.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6자회담의 개최국일 뿐 아니라,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둘째, 2차 핵문제의 진행 과정은 동북아에서 냉전적 동맹관계를 크게 동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sup>3</sup> 동북아에서 냉전적 동맹관계의 두 축은 중국과 북한(1961), 한국과 미국(1954)의 동맹관계였다. 2차 핵위기에 직면하여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오랜 관행을 깨고 북한의 외교안보 문제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했다. 다른 한편에서 2차 핵위기 진행 과정, 특히 2001년 부시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의 등장과 함께, 한·미관계는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적어도 부시 정부 1기 동안에는 한국과 미국보다는 한국과 중국 사이에 정책의 간극이 좁았으며, 또한 협력도 증가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과 미국은 북한핵문제의 해결 과정을 단순히 좁은 의미에서 또한 단기적 의미에서 북한핵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중장기적 의미에서 미국과 중국의 동북아에 대한 영향력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즉 미국과 중국은 공히 동북아시아에서 성격이 다른 장기·단기 두 게임을 동시에 치르고 있다.<sup>4</sup> 단기 계

---

<sup>3</sup> Samuel S. Kim, "China and North Korea in a Changing World," *Uneasy Allies: Fifty Years of China-North Korea Relations* (Asia Program Special Report,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Sept. 2003), p. 11.

<sup>4</sup> Aaron L. Friedberg, "U.S. Strategy in Northeast Asia: Short and Long-Term Challenges," Wilson Lee etc. ed., *U.S. Strategy in the Asia-Pacific Region. A Conference Report*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2003), pp. 18~30; David Shambaugh, "China and the Korean Peninsula: Playing for the Long Term," *The Washington Quarterly* (Spring 2003), pp. 43~56; Liu Ming,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Sino-American Co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XVI, No. 1, (Spring 2004), pp. 135~153.

임은 북한핵 게임이며, 장기 게임은 동아시아에서의 장기간 경쟁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의 정도 그리고 양자관계의 구조적 틀과 규범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를 두고 반드시 영합게임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에서 상당한 정도의 공조를 진행하고 있는 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과거 미국과 중국은 오랫동안 특히 1970년대 관계정상화 시기 이후 한반도의 두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해 긴밀히 논의해 왔다. 양측은 상대방의 영향권에 관한 이익을 존중하면서, 남북관계의 관리(‘평화와 안정’)에 일정한 책임을 공유해 왔다.<sup>5</sup> 냉전 이후 새로운 환경 속에서 중국과 북한, 미국과 한국 간의 관계가 점차 이완되어 가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은 북한핵문제를 계기로 한반도 장래의 틀을 형성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역사상 유례없는 협력 구도를 만들어 내었다.

물론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경쟁 또는 협력이 단지 2차 핵위기로 촉발된 것은 아니다. 멀리보자면, 중국이 한국 전쟁에 개입하게 되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미국의 영향력이 중국의 동북 국경에 미치고, 중국 주변국을 망라한 대중 포위망이 구성될 수 있다는 우려였다.<sup>6</sup> 1970년대 이후 소련이라는 공동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과 중국이 화해함에 따라 각자 한반도에 대한 기득권과 현상유지에 만족했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의 대립

---

<sup>5</sup> 오진용, 김일성 시대의 중소와 남북한 (서울: 나남출판, 2004) 참조.

<sup>6</sup> Chen Jian,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 The Making of the Sino-American Confront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주지안룡, 모택동은 왜 한국전쟁에 개입했을까? (서울: 역사넷, 2005).

이 지속되는 가운데, 1990년대 들어 한국과 중국이 국교를 수립함에 따라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두했던 남북화해 가능성은 동북아에서 지속되었던 냉전적 현상과 동맹구조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제기했다.

남북화해, 그리고 좀 더 멀리 볼 때, 한반도 두 국가의 통일 가능성이 제기한 도전의 핵심은 두 가지의 전략적 난제였다.<sup>7</sup> 첫째, 남북화해에 따라 미군주권에 기초를 둔 한·미동맹, 나아가 미·일동맹의 존재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 둘째, 앞으로 등장할 동북아 세력관계에서 통일한국이 차지하게 될 지위와 위치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었다. 이는 특히 미국이 그간 누리고 있던 동북아에서의 기득권에 대한 재편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나아가 중국의 향후 동북아에서의 지위와 위치와 관련된 것이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의 공통된 우려 사항 중의 하나는 남북화해가 한국과 북한의 주도로 또한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경우, 현상변경을 둘러싼 상황의 전개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며, 그러한 가운데 자신들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sup>8</sup>

이러한 가운데 부시 행정부는, 자신의 동북아 정책, 9·11 이후 대테러 전쟁, 2차 핵위기 등의 여러 계기를 미국이 동북아의 현상

---

<sup>7</sup> Charles M. Perry and Toshi Yoshihara, *The US-Japanese Alliance: Preparing for Korean Unification & Beyond* (Herndon: Brassey's Inc., 2003), pp. 50~116.

<sup>8</sup> Kent E. Calder, "U.S. Foreign Policy in North East Asia," Samuel S. Kim ed.,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North East Asia*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4), pp. 225~248; Xiaoxiong Yi, "A Neutralized Korea? The North-South Rapprochement and China's Korea Policy," *The Korea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XII, No.2 (Winter 2000).

변경 과정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회복하는 방향에서 유리하게 활용하고자 시도했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문제를 핵심화두로 설정하면서 남북화해 과정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며, 특히 2차 핵문제 대두 이후 한반도문제 해결과 동북아 세력 재편 과정에서 중국과 협력하면서 6자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구도는 남북화해와 동북아 세력 재편을 미국과 중국의 감독권, 그리고 관계 당사국의 개입 하에서 상호 연계시킴으로써, 한국과 북한 주도의 또한 급속한 현상 변경이 초래할 수 있는 불확실성 통제를 위한 동북아 국가 간 상호협력체계(concert)를 만들어내고 있다.<sup>9</sup>

이러한 가운데 한국과 미국, 중국과 북한 사이에 성립해 있던 전통적 동맹 및 협조 관계의 구속력이 줄어들면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과 북한의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한편, 바로 그 때문에 전반적으로 새로운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남북관계의 진전을 더 중시하는 가운데, 미국과 협력하는 한편 갈등하고 있는 등, 중국과 북한, 미국과 북한, 한국과 북한 사이에도 협력과 동시에 갈등이 진행되고 있고, 핵문제 해결과 함께 동북아 미래 질서의 재설정을 위한 계기를 마련해 가고 있다. 여기서 핵심적 사항 중의 하나는 앞으로 한국, 또는 통일한국이 주변국가와 어떠한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며, 그러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의 두 국가 또는 통일한국에 대한 영향력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만약 미국 주도로 핵문제가 처리

---

<sup>9</sup> David Kerr, "The Sino-Russian Partnership and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From Hegemony to Concert in Northeast Asia,"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9 (2005).

되고, 장기적 차원에서 미국의 지위가 향상되면, 미국에게는 최선의 결과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중국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의 북한핵문제 처리를 중심으로 강화된 한반도문제 처리과정에서의 공동보조, 그와 함께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단기적·장기적 협력과 갈등이 한국의 대북통일정책 그리고 외교정책에 끼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인가? 미국과 중국이 단기 및 장기의 이중 게임을 하고 있다면, 한국의 단기 및 장기의 이중 게임은 무엇을 목적으로 어떻게 취해져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를 규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제2장과 3장에서 미국과 중국에 존재하는 북한핵문제 해결에 관한 정책적 대안, 한반도에 대한 중장기 전략 이익 인식과 목표 설정 등을 규명하고자 한다. 앞에서 시사했듯이, 핵문제라는 당면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은 미국과 중국의 중장기적인 한반도 인식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4장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개념상의 차이를 둘러싼 협력과 갈등이 한국-미국-북한의 3자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한다. 이 게임에 중국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지만, 현재와 같은 중국의 존재 자체가 이러한 게임 틀의 형성에 기여했다. 또한 이러한 게임 틀의 관리 양상은 한·미 동맹관계의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끼치며, 이는 중국의 중요한 관심사이다. 제5장은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고 앞에서 분석한 한국-북한-미국-중국의 관계가 한국 대북정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제기하는 문제를 서술한다. 여기서는 서술상의 편의, 다른 연구와의 중복 회피를 위해, 2차 핵위기의 구체적 전개과정 또는 주요 국가

의 현 정책보다는 그러한 사항들의 배경이 되는 보다 거시적 차원의 전략구상에 주로 주목한다. 또한 제2장에서는 미국내 대북 정책에 대한 여러 관념, 그 배경이 되는 논거 등을 소개함으로써 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sup>10</sup>

---

<sup>10</sup> 궁극적 관심은 개별 국가의 대북정책 자체이기보다는 그와 관련된 그 상호 게임과 구조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일본과 러시아를 포함해야 하고, 6자의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게임구조를 파악해 내야 한다. 여기서는 여건상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분석에 만족한다.



# II

## 미국의 대북 핵정책과 한반도 구상



미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에 대한 중장기 구상에는 개략적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일 동맹을 주축으로 하고, 미·한 동맹을 유지하여 미국이 이 지역에서 주도적 세력으로 계속 남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 또는 한국과의 관계에서의 미국의 위상 변화는 미국이 이러한 지위를 유지하는 데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중장기 구상에서와는 달리, 단기적으로 북한핵을 처리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에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크게 분류해 보면 3가지로, 신-맞춤형 봉쇄정책, 조건포용 또는 매파 포용, 그리고 협력 포용의 개념이다. 각 전략 개념마다 북한의 의도, 합당한 대응 정책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서는 먼저 북한핵문제 처리에 관한 3가지 개념에 대해 서술하고, 그 후 미국의 중장기 동북아 및 한반도 구상에 대해 서술한다.

## 1. 미국의 대북 핵정책

냉전 기간 동안 미국의 공산국가에 대한 정책기조는 봉쇄정책이었다. 그러던 것이 닉슨과 키신저에 의해 1971년경부터 점차로 포용정책으로 전환되었다. 그 후 굴곡은 있었지만 미국의 대통령들은 전임자의 정책을 지속했다.<sup>11</sup> 특히 클린턴 대통령은 1994년 북한과 제네바 합의를 끌어냈으며, 1998년 이후는 한국정부와 보

---

<sup>11</sup> C. Kenneth Quinones, "Dealing with Pyongyang: In Search of a More Effective Strategy,"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4, No. 1, pp. 1~30.

조를 맞추어 대북포용을 추진했다.

북한에 대한 정책전환은 2001년 부시 대통령 취임과 함께 시작되었다. 특히 2002년 10월 핵위기 재발 이후, 미국과 북한 간의 긴장증가 과정에서 매우 강경한 신-봉쇄정책으로 그 모습이 분명해졌다. 2003년 6월의 3차 6자회담은 미국이 대북정책에서 태도를 완화했음을 보여주었다. 태도의 완화는 부시 정부 2기 출범과 라이스 국무장관의 취임 후에 개최된 2005년 9월의 4차 6자회담에서 더욱 분명해졌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에 반대하는 정책대안으로서 과거 클린턴 정부의 포용정책 개념에 입각하여 미국 민간에서 여러 포용정책의 제안이 있어 왔다.

### 가. 맞춤형 신 봉쇄정책

부시 정부 내에서 매우 강경한 정책 입장과 보다 덜 강경한 정책입장이 경쟁했다. 그런데 2002년 10월 이후 2차 농축우라늄 의혹 제기, 북한의 강경 대응, 그리고 제네바 합의 폐기 등은 부시 정부 내에서 북한을 다루는 데서 협상 옹호세력에 큰 어려움을 제기했다. 그리하여 북한이 제기하는 단기 위협을 강조하면서 보다 직접적인 대결을 추진하는 세력과, 북한에 압력을 가하기 위하여 외교적 접근을 통해 다자적인 연합을 구성하자는 의견이 세력을 강화했다.<sup>12</sup> 이러한 견해는 국방장관 럼스펠드를 위시한 펜타곤의 관료와 자문가들, 체이니 부통령실의 관료들, 국무차관 존 볼튼이 이끄는 국무부와 백악관의 확산 전문가의 영향력 있는 동

---

<sup>12</sup> L. Gordon Flake, "The Coming Crisis in Korea: a Rubicon Crossed," *Asia-Pacific Review*, Vol. 10, No. 2 (2003), pp. 2~18.

맹이 주도하고 있었다.

이들은 북한이 협상이나 ‘뇌물’을 통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보았고, 따라서 한반도를 비핵화하는 유일한 방법은 정권 교체라고 생각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로서,<sup>13</sup> 첫째, 핵무기는 무력 통일을 추구하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무력통일은 현재 재래식 군사력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량살상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한·미 연합군의 군사력의 강력함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약화시켜 미군을 철수시킨 후, 한국을 점령하는 것을 전략으로 삼고 있다고 생각했다. 둘째, 핵무기는 북한이 강대국과 동등한 지위를 누리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되면, 북한의 국제정치상 중요성은 자신의 경제능력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축소되는데, 이는 북한 지도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북한과 협상을 통해 핵위기를 해결할 개연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았다. 북한은 위협스러운 제한적 실험을 조심스럽게 추진할 것이지만, 경제적으로 개혁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고, 그 대신에 외국 정부와 민간단체로부터 원조를 수용하거나 군사위협을 통해 원조를 약탈하는 방식의 생존을 추구할 것이라 보았다.

---

<sup>13</sup> Nicholas Eberstadt, “North Korea’s Weapons Quest,” *The National Interest* (Summer 2005); Nicholas Eberstadt, “North Korea’s Survival Game: Understanding the Recent Past, Thinking about Future,” Ahn Choong-yong, Nicholas Eberstadt, Lee Young-sun, *A New International Engagement Framework for North Korea?: Contending Perspectives*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2004), pp. 63~116; Stephen Bradner, “North Korea’s Strategy,” Henry D. Sokolski, ed., *Planning for a Peaceful Korea* (Carlisle Barracks, PA: U.S. Army War College, Strategic Studies Institute, 2001), pp. 28~40.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이들의 정책은 세 가지 요소를 포함했다. 첫째, 일방적 양보의 요구, 둘째, 북한과의 직접 협상의 회피, 셋째, 북한의 국제적 고립이었다.<sup>14</sup> 이들은 북한과의 협상 대신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양보해야 할 요구 목록을 선호했다. 일방적 양보와 관련하여, 미 정부는 북한이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 계획을 포함한 “핵계획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폐기할 것(CVID)”을 요구했다. 북한이 이러한 요구에 순응해 올 때까지 ‘무대응, 무대화’로 대응하면서 협상에 응하지 않고자 했다. 다른 한편, 순응을 강제하기 위해 미국은 다자동맹 형성에 주력하는 한편, 동시에 외교적으로 그리고 경제제재를 통해 북한을 고립시키며 북한정권의 붕괴를 초래하고자 의도했다.

다자동맹의 형성 일환으로 2003년 초, 미 정부는 북한의 ‘고립’을 위한 다자회담을 제안했다.<sup>15</sup> 6자회담은 미 정부가 북한과 직접 양자 협상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해 주었다. 미 정부는 6자회담을 북한의 완전한 핵계획 포기를 주문하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가 지지해 주는 수단이라고 보았다. 미국은 6자회담에서 5대 1의 상황을 만들어 내하고자 했다. 다자동맹을 통해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목표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었다.<sup>16</sup> 첫 번째 요소는 핵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이 다른 정부들로부터 어떠한 외교적 지지도 받지 못하도록 고립시키며, 북한이 CVID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정부 간의 블록을 만드는 것이었다. 두 번

<sup>14</sup> Larry A. Niksch,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Updated September 28, 2004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p. 3.

<sup>15</sup> Flake, “The Coming Crisis in Korea,” p. 14; Jonathan Pollack, “The United States, North Korea, and the End of the Agreed Framework,” *Naval War College Review*, Vol. LVI, No. 3 (Summer 2003), p. 38.

<sup>16</sup> Niksch,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p. 3.

째 요소는, 북한이 CVID를 거부하는 경우, 북한에 경제제재를 가할 용의가 있는 정부들의 광범한 연합을 만드는 것이었다.

외교적인 다자동맹의 형성 전략과 함께,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 수단이 강구되었다. 2003년 5월 부시 대통령은 확산방지구상(PSI)을 제안했는데, 이는 확산국가들의 대량살상무기나 불법 마약 수출에 대한 제지를 목표로 했다. 미국과 10여 개국 이상의 국가는 해상과 공중의 교통에서 북한을 제지하기 위한 조치를 계획했다. 행정부는 일본과 여타 자금원으로부터 북한으로 흘러가는 금융자원을 차단하는 것과 북한 미사일과 기타 무기의 중동과 남아시아로의 해상 수송을 제지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제제재안을 기안했다고 알려졌다. PSI의 목적은 북한 정치엘리트와 북한군의 주요 생계수단인 북한의 외환수입을 현저히 제한하는 것이었다. PSI의 옹호자들은 이러한 재정상 압박이 정권 내부에 압력을 만들어내어 북한의 미국 요구 수용이나 평양정권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믿었다.

북한의 주요 경화수입원은 무기수출, 불법마약판매, 위조지폐 거래, 해외송금, 국제원조 등 5가지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경화수입이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 엘리트 번영의 원천이며, 해마다 북한이 누적하고 있는 막대한 무역적자를 메우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북한을 고립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북한경제 전반에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김정일과 정권엘리트의 경제적 번영만을 위협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7</sup> 그 옹호자 중의 하나인 호로위

---

<sup>17</sup> 같은 맥락의 논리전개로서, Nicholas Eberstadt, "A Turn of the Screw," *On the Issue*, *AEI Online* (March 1, 2003).

츠(Michael Horowitz)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미국은 관련 주요 국가들과 협력하여 압력이 무작위적으로 가 아니라 북한 엘리트에 정확히 행사되도록 해야 한다. 무기 수출을 계속 제한하고, 북한의 마약거래와 위조지폐거래를 단속하고 원조와 송금에 분명한 조건을 거는 능력을 쌓음으로써,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 엘리트의 경제적 번영을 위협에 빠뜨리고, 전통적 미국의 경제제재 패키지가 달성하지 못했던 바의 압력을 북한 정권에 가하게 될 것이다. 최선의 경우를 보면, 다자 협력을 통한 북한 엘리트에 대한 직접적 압력행사는 정권이 부담할 수 없을 정도까지 핵계획 유지비용을 상승시켜 북한으로 하여금 성실한 협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sup>18</sup>

이와는 달리 경제적 유인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제전략은 김정일에게 미국과 동맹국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자원을 추출해낼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한편, 핵계획이라는 그의 최고의 흥정수단을 영원히 포기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고 했다.<sup>19</sup>

이 밖에도 맞춤형 봉쇄와 관련되어 거론되고 있는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과 한국은 보다 장거리, 중심 타격 능력에 초점을 두고 한반도에서의 군사태세를 전환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평양 방어를 위해 전진배치한 군사력을 감소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주민을 돕고 포용하도록 고안된 식량지원을 지속하는 등 인도주의적인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미국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이 중국 및

---

<sup>18</sup> Michael Horowitz, "Who's Behind That Curtain? Unveiling Potential Leverage over Pyongyang," *The Washington Quarterly* (Winter 2004/05), pp. 21~44, 여기서는 p. 38.

<sup>19</sup> *Ibid.*, p. 28.

다른 나라에게 탈북자 수용캠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권고하고, 미국에 안식처를 원하는 난민에 부합하는 제한된 북한인을 수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sup>20</sup>

이와 같은 논리의 맞춤형 신 봉쇄전략은 북한의 고립에 목표를 두고 있을 뿐, 그 이상 직접적인 군사수단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었다. 고립정책을 추진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것이 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가장 낮기 때문이다.<sup>21</sup> 물론 고립정책에 대해서도 북한의 보복 위험성은 인지되고 있었다. 북한은 미국의 고립과 제재를 전쟁행위로 간주한다고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정책들은 한층 더 강압적이었기 때문에, 전쟁위험을 더 높이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배제할 수 없는 정책대안이었지 적극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미국의 선제공격 행위는 한·미 동맹의 파국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미국을 ‘불량국가’로 낙인 찍히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다.<sup>22</sup>

그리고 이와 같은 고립전략이 초래할 수 있는 향후 시나리오로 두 가지가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첫째,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 행세를 하는 상황, 둘째, 북한의 내부 붕괴이다. 핵실험 등을 통해 노골적이고 공개적으로 핵보유국임을 과시하는 전략은 북한에게 쉽지 않은 선택이었던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는 고위험/고수익의 선택이었기 때문이었다.<sup>23</sup> 가장 가능성이

---

<sup>20</sup> Victor D. Cha and David C. Kang, *Nuclear North Korea: A Debate on Engagement Strateg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3), p. 157.

<sup>21</sup> *Ibid.*, p. 159.

<sup>22</sup> Nicholas Eberstadt, “Alternative Scenarios for the Korean Peninsula,” *Strategic Asia* 2004/05, pp. 127~128.

<sup>23</sup> *Ibid.*, pp. 124~127.

높은 것은 ‘공격적인 핵 모호성’ 정책인 것으로 상정되었다. 이러한 경우, 북한핵위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 간의 군사동맹이 해체되는 개연성도 있을 것으로 상정되었다. 이 시나리오를 보면, 먼저 북한의 핵능력과 ‘암시적 핵 위협’이 점차로 증가하고, 북한의 핵계획에 대한 신경전이 장기화된다. 한국국민은 북한이 한국에 대해 적대의도나 안보위협을 제기하고 있는가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한편, 한국국민과 무관하고 통제할 수도 없는 북·미간의 대립과 교착상태가 한국에게 무리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는 인식을 강화해 간다. 그 결과는 한·미안보조약과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국민의 지지를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 나. 매파 포용

빅터 차가 주장하고 있는 매파 포용전략은 가장 포괄적이고 분석적으로 세련된 전략 개념이다. 이 논리의 출발점은 북한의 의도에 대한 회의론적 시각이었다. 이 논리는 ‘햇볕정책’ 식의 무비판적 긍정이나 봉쇄 주장 측의 무조건적이고 도덕적인 불신을 비판하는 한편, 북한의도에 대한 시험을 중요시 한다. 만약 북한이 그 시험에 합격하면 포용정책을 펴야 하고, 불합격하면 고립과 봉쇄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과의 협상에서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수동적으로 대응하지 말아야 하며, 협상에서 기선을 잡아야 하고, 포용을 추진하더라도 그것이 실패하는 경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리는 두 개의 다른 전략 선택, 즉 한국의 ‘햇볕정책’ 식 포용, 강경파의 봉쇄와 강압에 대한 대안 개념임과 동시에 그것을 내부적으로 포괄

하고 있다. 여기서는 빅터 차의 ㉠ 북한의 대외 행태의 동기에 대한 분석, 그에 기초한 ㉡ 매파 포용의 정책적 논리에 따라 설명한다.

매파 포용론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은 북한의 전면적 남침 가능성이 아니라, 전면전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의도적이고 한정된 폭력행위”<sup>24</sup>라고 보았다. 북한이 이러한 폭력을 도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때는 스스로가 보기에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으며, 그대로 있으면 어차피 망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망하느니 위협을 무릅쓰고 제한적으로 무력을 행사하여 위기를 만들어 내어 현상을 교란한 후, 긴장상황에서 강압적 흥정을 유도하여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곤 해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중심적 세력균형이 북한의 군사적 승리에 대한 현실적인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제한적으로 ‘공격적 급습’ 또는 ‘선제공격’을 최선의 유일한 정책이라고 인식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성격의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은 포용으로 설정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포용을 통해 북한이 현재 상황을 절박한 패배 상황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둘째, 포용을 통해 협상에서 기선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전자와 관련해서 보면, 포용은 북한의 절망감을 완화시키고 현상유지에 이해관계를 갖게 함으로써, 현상교란 행위를 막

---

<sup>24</sup> Victor D. Cha, “Hawk Engagement and Preventive Defense on the Korean Peninsula,” *International Security*, Vol. 27, No. 1 (Summer 2002), pp. 40~78.

을 수 있다는 것이다. 포용은 물론 필요한 억지조치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포용은 북한의 현상에 대한 판단을 바꿀 수 있다. 즉 포용은 당면 상황이 나쁘다고 해도 보다 장기적으로 보면 개선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북한으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며, 나아가 북한의 인식 가운데 상대측이 북한을 곧 공격해올 것이라는 식의 위협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에 비해, 봉쇄+고립, 또는 봉쇄+강압은 북한의 취약성을 강화시킴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더욱 더 현재의 현상유지를 패배로 인식하도록 만들고, 그리하여 모든 것을 잃을 위험에도 불구하고 ‘두 배를 벌기 위해’ 도박하는 것을 시도하도록 만들어 북한 측의 선제적 도발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후자와 관련해서 보면, 포용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재판정의 원고 입장에서 협상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협상의 기선을 잡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과거 북한이 제한적인 폭력을 행사하면, 미국, 한국, 일본 등 세 나라는 북한의 나쁜 짓에 대해 징벌적으로 대응하고 싶었지만, 불필요하고 값비싼 대규모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자제하게 되는 난처한 상황에 빠져 들곤 하였다. 그 결과, 동맹국들은 북한의 행위를 비난하면서도 긴장감소를 위해 협상테이블에 나가곤 했다. 북한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강압적인 흥정 과정으로부터 결과되는 새로운 현상은 북한에 더 유리했다. 따라서 포용을 통해 북한이 현상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무엇인가 잃을 것이 있게 되는 경우, 현 상황을 바꾸려고 도박할 생각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sup>25</sup>

---

<sup>25</sup> Cha and Kang, *Nuclear North Korea: A Debate on Engagement*

매파 포용은 포용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할 때는 전통적 봉쇄+고립 정책과 논리적 각을 세우지만, 포용을 기반으로 북한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햇볕정책’과 각을 세우고 있다.<sup>26</sup> 매파 포용은 햇볕정책과 가장 큰 차이를 북한의 의도에 대한 태도에서 찾고 있다. 즉 햇볕정책이 북한의 현재적+잠재적 변화의도에 대한 신뢰에 기반하여 ‘무조건 포용’과 낙관론에 입각하는 데 비하여, 매파 포용은 “한층 더 비관적이며, 더 적은 신뢰를 주며, 정책이 실패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 실용주의적 계산을 한다”<sup>27</sup>는 것이다. 즉 첫째, 한국의 햇볕정책처럼 북한의 개혁의지에 대해 끊임없는 신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포용을 통해 북한이 진실로 개혁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시험하고, 그 시험에 불합격하면 징벌 연합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자신의 진실성을 입증하자면, 북한은 자신에게 진실로 소중한 무엇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장사정포와 여타 체계를 포함하여 군사태세의 핵심인 전진배치 전력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의 햇볕정책이 인내를 강조하고, 대상 국가가 호혜적으로 대응 협력을 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 비해, 매파 포용은 북한의 나쁜 행위를 훨씬 덜 용납한다는 것이다. 즉 만약 북한이 벼랑끝 전술과 질이 나쁜 ‘주목 끌기’ 행위를 또 다시 행하게 되면, 미국은 아마도 징벌로 반응할 것이라는 것이다. 셋째, 만약 포용이 북한의 행위를 평화적 개혁과 비확산으로 변경

---

*Strategies*, p. 88.

<sup>26</sup> *Ibid.*, pp. 89~100.

<sup>27</sup> *Ibid.*, p. 153.

시키지 못한다면, 미국과 동맹국들은 일련의 강압 정책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것은 ‘악의적 무시’로 정권을 고립시키고 봉쇄하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앞서 설명한 맞춤형 봉쇄와 내용이 일치한다.

빅터 차가 보기에, 2002년 10월 우라늄 농축시도의 폭로 후 북한의 대응은 미국의 대북정책을 크게 변경시켰다. 그 이전은 포용이었는데, 그 이후는 고립 정책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2002년 6월에 발표되었던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문은 일단 포용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북한의 의도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주요 내용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기타 우려 사항을 확실히 먼저 해소하면, 북한에게 적대적 환경 속에서 고립된 입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과감한 접근법’이라고 불렸다. 그런데 2002년 10월에 야기된 2차 북핵 위기는 북한의 개혁 노력이 단순한 전술적 변화로서 전략적 선호의 진실된 변화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sup>28</sup> 따라서 농축우라늄 폭로 이후에는 포용이 가능한 정책방안이 아니라고 본다. 그 이유는 애초에 매파 포용의 성립 근거가 상대방의 의도 파악이었는데, 이제 부정적 의도가 확실히 드러났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응을 결정짓는 핵심은 북한이 핵시설을 일방적으로 해체하는 조치를 취할 것인가 여부이다. 그러한 경우, 미국은 북한에 대해 포용을 다시 취할 하게 될 것이지만, 이는 북한에 대해 강화된 회의와 불신에 기반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추가적인 나쁜 행위를 용납하는 인내의 한계가 좁아질 것이며 보다 조속히 보다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만약

---

<sup>28</sup> *Ibid.*, pp. 159~160.

북한이 핵시설을 조기에 일방적으로 해체하지 않는 경우, 곧바로 고립과 봉쇄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빅터 차가 제2차 핵위기의 발발을 북한에 대한 포용의 종결, 고립과 봉쇄로의 전환의 계기로 본 데 대해, 마르타 베일리는 6자회담의 틀을 기초로 조건부 포용 정책의 추진을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sup>29</sup> 그는 포용전략은 북한이 개혁을 원하며 또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지만,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 전략은 분명하고 검증가능하며 실행가능한 조건에서 실행되어야 한다고 한다. 김정일은 북한정권을 개방하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지만, 그의 주요 관심인 정권 생존을 충족시켜주는 안전보장과 결부된 조건부 포용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북한에 제공되는 점진적 원조는 검증 팀의 검사 하에서 핵계획의 폐기에 이르는 분명히 명시된 상응조치와 결부되어야 한다. 다자압력과 상응조치에 대한 명확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은 요구에 완전히 응하지 않으면서 원조를 정권생존을 위해 활용하는 뛰어난 능력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연성권력을 사용하여 북한 내부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연성권력과 관련하여 정보유입, 원조계획, 인권, 난민문제, 경화자금원 차단 등을 들고 있다.

---

<sup>29</sup> Marta J. Bailey, "Another Engagement Strategy for North Korea," *PFO 04-31* (Nautilus Institute: August 16, 2004), pp. 1~22.

## 다. 협력 포용

협력 포용의 개념은 매파 포용과 상관지어질 때, 그 특징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매파 포용은 북한의 개혁의도에 대한 회의와 불신, 전술적 공격성에 대한 경계, 북한의 의도에 대한 시험 후 포용 혹은 고립 결정, 포용 실패의 경우 강압책에 대한 진지한 숙고 등을 특징으로 했다. 이에 대해 협력 포용에 속하는 논리들의 주요한 경향적 특징은 북한의 개혁의도에 대한 신뢰, 북한이 느끼는 안보위협감에 대한 이해 표시, 북한이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변화와 개혁에 대한 강조, 북한의 안보우려를 해소하는 대신에 주변국가가 안전보장, 경제지원을 제공하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과정의 추진 선호 등이다. 이러한 태도와 논리체계는 대체로 클린턴 시기의 대북포용정책 추진론자, 김대중 및 노무현 시기의 한국의 대북정책, 부시 정부 하에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재야의 여러 정책 제안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는 미국 포용론자들의 북한 의도에 대한 평가와 정책 내용을 서술한다.

포용의 대표적 논자의 하나인 데이비드 강의 논지는 다음과 같다.<sup>30</sup> 앞으로 20년 동안 김정일의 북한과 함께 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을 현재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상대해야 한다. 지

---

<sup>30</sup> David C. Kang, "North Korea: Deterrence through Danger," Muthiah Alagappa ed., *Asian Security Practice: Material and Ideational Influenc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pp. 214~264; David C. Kang, "The Avoidable Crisis in North Korea," *Orbis* (Summer 2003), pp. 495~510; Victor D. Cha and David C. Kang, "Can North Korea be Engaged? An Exchange between Victor D. Cha and David C. Kang," *Survival*, vol. 46, no. 2 (Summer 2004), pp. 89~108; Victor D. Cha and David C. Kang, *Nuclear North Korea: A Debate on Engagement Strategies*.

난 10년 동안 북한의 안보정책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지만, 경제 상황은 현저히 변화했다. 따라서 북한을 다루는 데서 핵문제만 보지 말고 경제문제도 보아야 한다. 북한은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고 있으며, 문을 열고 있으며, 많은 변화는 급속하게 불가역적이 되어 가고 있다. 미국이 인내와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 지향적 개혁을 촉진시키는 것이 북한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정책이다. 그 이유는 그것이 점진적이고 평화적이기 때문이다. 고립과 압력은 북한 정권에 거의 효과가 없을 것이며, 미국을 반응해야 하는 처지로 만든다. 김정일은 자발적으로 권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지만, 경제에서 자유가 증가하면, 그는 권력을 포기해야만 할 것이다. 국력이 압도적인 미국은 그 존재 자체로도 북한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북한의 안보우려를 무시하는 것은 북한 행위의 원인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를 인정하면 북한의 행위 패턴을 설명할 수 있고, 해결책도 제시할 수 있다. 북한은 미국이 급작스럽고 위협스럽게 행위하는 것을 억지하기 위해 군사 및 핵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새로 시작된 농축우라늄 계획도 스스로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일관성이 있다. 제네바 합의가 붕괴된 데에는 북한뿐 아니라 미국의 클린턴 및 부시 행정부에도 책임이 있다. 미국은 북한을 효과적으로 억지해 왔으며, 북한의 핵개발이나 우라늄농축 시도 때문에 억지의 효력이나 한반도 세력균형에서 변화한 것은 없다. 미국의 압력정책은 북한을 더 불안하게 만들 것이다. 고립도 기껏해야 시간 끌기 조치에 불과하다. 경제제재 가지고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계획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 없다. 북한의 안보우려를 해소하기 전에는 핵무기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도 진전이 없을 것이다. 북한은 핵계획

을 폐기하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기를 원해 왔다. 미국은 북한에게 안전보장을 제공하여 미국의 군사행동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감소시켜야 한다. 포용전략은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환경을 덜 위협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만드는 한편, 세계에 개방할 때 얻게 되는 이익들을 분명하게 해줄 것이다.

빅터 차와 데이비드 강은 일련의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는 데서 기반이 되는 일련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공동견해를 제시하고 있다.<sup>31</sup> 그것은 첫째, 한·미동맹을 기초로 북한에 대한 강력한 방위 및 억지 능력 보유, 둘째, 서울, 도쿄, 워싱턴 사이의 3자 협력과 조정, 셋째, 이산가족 상봉, 하부구조 복원, 무역과 투자 촉진 등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동의, 그러나 더 많은 조건의 부과 필요, 넷째, 세계식량기구를 통한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식량원조 및 포괄적 검증과 모든 지역에 대한 접근 요구, 다섯째, 중국과의 협의 및 중국의 대화 촉진자로서의 역할 독려, 여섯째, 북한의 모든 나쁜 행위에 대한 즉각적이고 단호한 보복 등이다. 특히 여섯째 항목과 관련하여 북한에 대한 무력사용 완전 배제는 핵무장한 북한을 용납할 수 있다는 것, 강압에 의해 북한이 설령 붕괴하더라도 그 처리비용 또는 ‘통일비용’은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핵무장한 북한을 용납하는 비용보다는 작을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큰 틀에서 보았을 때, 협력 포용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는 정책 제안으로서 마이클 오해론과 마이크 모치주키의 ‘대홍정’ 제안을 들 수 있다.<sup>32</sup> 이들 주장의 특징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포기에만

---

<sup>31</sup> Cha and Kang, *Nuclear North Korea: A Debate on Engagement Strategies*, pp. 163~166.

국한하지 말고, 북한의 재래식 군사 위협 감소와 함께, 생화학무기 제거,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 위조지폐와 마약거래 중단, 외부와 인권문제 대화 등 북한과 관련한 현안을 모두 망라하는 요구 목록을 북한에 제시하는 대신, 대규모 경제지원, 북한에 대한 안보 확약, 미국 및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등 북한의 관심사항을 일괄 교환하는 ‘대홍정’을 하자는 것이다.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북한경제 회생만이 북한의 도발적 행위 동기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북한과의 협상은 핵과 미사일 관련 사항에 국한되었으며, 일정한 성과를 얻은 것도 사실이지만, 경제상황을 개선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북한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위기조성을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원조를 약탈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를 만들어낸 원인의 핵심은 경제이며, 경제를 재건하는 계획만이 지금의 핵위기를 제거하고 미래의 그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경제 개선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북한 국민총생산의 20% 이상을 점하고 있는 군비지출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군비감축에 대한 대가로 경제원조를 연계하는 것을 핵심으로 북한과의 ‘대홍정’을 하여 모든 문제를 일괄 해결하자는 것이다.<sup>33</sup>

다시 말해 두 사람의 제안은 북한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대신, 더 많은 것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사실, 북한의 재래식 군비를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와 함께 대북 협상의 중요한 포괄의

<sup>32</sup> 마이클 오렌론, 마이크 모치주키, 대타협: 북한 vs 미국, 평화를 위한 로드맵 (서울: 삼인, 2004).

<sup>33</sup> 이밖에도 ‘포괄적 접근’에 관련된 정책 제안으로서, William M. Drennen, “A Comprehensive Resolution of the Korean War,” *Special Report 106* (Washington: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May 2003).

제로 상정했던 것은 부시 행정부의 2001년 6월 대북정책 제안이었다. 그러나 부시 정부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 어떤 보상을 할 것인가에 대해 매우 모호하게만 언급했었다. 미국은 단지 ‘북한주민을 돕고, 경제제재를 완화하며, 여타 정치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만 언급하는 데 그쳤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북한에 과거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그 보상을 줄인 것에 다름없었다.<sup>34</sup>

‘대홍정’ 제안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남북한과 미국이 한반도에서 재래식 무기를 감축하는 방안, 그와 관련한 대북 보상규모에 관해 비교적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제안의 중요한 내용은 북한, 그리고 한국과 미국은 재래식 군사력의 50% 가량을 감축한다, 이를 통해 서울을 향해 집중하고 있는 북한의 화포와 로켓포의 위협을 감소시키도록 요구하지만, 전진배치된 군사력 전부를 철수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군비감축은 북한에 약간 유리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어느 쪽도 상대방에 대한 억지능력에서 손상받지 않는다, 북한은 미국, 한국, 일본으로부터 10년에 걸쳐 매년 20억 달러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다 등의 것이다. 이 중에서 미국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금액은 개발원조 명목으로 3억 달러, 인도적 지원 및 중유 공급까지 포함하면 5억 달러 정도로 상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조는 북한이 협상의 결과를 검증가능하게 준수할 때만 매년 지속적으로 제공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

<sup>34</sup> Gary Samore, “The Korean Nuclear Crisis,” *Survival*, vol. 45, no. 2 (Spring 2003), p. 11.

## 2. 미국의 한반도 구상: 핵문제와 그 이후

미국의 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경우에 북한핵문제의 해결 과정은 그 자체를 넘어서 미래의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미국의 지위와 연계되어 숙고되고 있다. 북한핵문제 해결에서 한국과 미국이 생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앞으로 한·미동맹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주요 시금석이 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러한 고려는 장기적으로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을 예견하면서,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지위가 동북아에서 미국의 지위와 전략구상 관철에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과 결부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 또는 통일한국이 미래에도 중국이 아니라 미국과 보다 긴밀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낙관적이지 않으며, 이러한 경향을 어떻게 약화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미국의 주요 정책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급변하는 동북아 정치에서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전략적 주축(pivot)의 지위를 차지하고<sup>35</sup>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동북아에서는 중국의 부상, 러시아의 몰락, 한국의 부상과 몰락하는 북한 때문에 세력관계의 변화가 극심했는데, 앞으로는 중국의 부상에 따라 중·미 경쟁관계, 중·일 경쟁관계가 벌어질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동북아의 교차점에 위치해 있으며, 4국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있다. 또한 중국, 일본, 러시아와 미국 등

---

<sup>35</sup> Samuel S. Kim and Tai Hwan Lee eds., *North Korea and North East Asia*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2), p. 5.

4국 모두 한반도를 자신의 지정학적 세력범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4국 모두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래의 동북아 관계에서 한반도의 중요성은 미국에게도 인식되고 있다. 미국은 특히 중국과 장기적인 경쟁관계에 돌입했는데, 단기적으로 북한핵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가에 따라 미국의 장기적인 지위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sup>36</sup> 미국에게 가장 좋은 경우는, 북한핵문제를 미국 주도로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그에 기초하여 중국과의 장기 경쟁에서의 승리 가능성도 높이는 경우이다. 가장 나쁜 경우는, 미국의 전략이 북한에 대해 승리를 쟁취하지 못하거나 또는 승리의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동북아에서 미국의 지위가 약화되는 경우이다. 같은 맥락에서 앞으로 미국의 동맹체제가 존속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는 상당한 정도로 한반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 틀림없다는 것이다.<sup>37</sup>

단기적으로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은 북한핵문제가 동아시아에서 동맹관계에 끼칠 영향, 둘째,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역할 신장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 일정한 한도에서 이익을 공유하고 있으며, 중국의 역할을 격려하고 있다. 중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지위 향상, 상대측 약화를 염두에 두면서 단기적으로 핵문제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

<sup>36</sup> Aaron L. Friedberg, “U.S. Strategy in Northeast Asia,” p. 18; Aaron L. Friedberg, “The Struggle for Mastery in Asia,” *Commentary* (November 2000), pp. 17~26.

<sup>37</sup> Cha and Kang, *Nuclear North Korea: A Debate on Engagement Strategies*, pp. 10, 169.

가장 우려하는 것은 중국이 한국과 미국 간에 존재하는 북한핵 처리에 관한 견해 차이를 활용하여 걸모습과는 다르게 실제적으로는 양자의 사이를 더욱 벌리려고 교묘하게 시도하는 것이다.<sup>38</sup> 미국의 태도가 완고하고 극단적인 것처럼 보일수록 이러한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이 커진다. 나아가 핵문제 처리 과정에서 미국의 동맹국 간에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적어도 미국 지위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만약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저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과 일본이 북한에 대해 유화정책을 취한다면, 두 국가와 미국과의 정책적 균열이 발생할 것이다. 반대로 미국의 안전보장의 향후 실효성에 대한 의심 때문에, 북한핵을 우려하여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 핵을 개발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미국이 두 국가의 핵보유에 대한 과거의 오랜 반대 입장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동맹관계가 긴장에 빠질 수도 있다. 또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중에서 한국만 북한핵에 대해 용인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일본은 북한핵의 유일한 목표가 일본이라고 간주하게 될 것이고, 미국의 안보공약의 유효성을 의심하면서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핵에 대해 한국이 유화적인 태도, 일본이 강경한 태도를 취하게 되면, 한·일 관계는 깨질 것이고 한국을 고립시켜 중국 쪽으로 몰아가게 될 것이며, 한국은 북한과 타협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지 못하는 경우, 미국의 평판,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이 심각히 침해될 것이고, 핵무기 확산을 초래할 것이며,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이고 파괴적인 공격의 위험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미국은 선제공격, 악의 축 등의 전략과 발언으로 쓸데없이 북한을 자극

<sup>38</sup> Friedberg, "The Struggle for Mastery in Asia," pp. 24, 27.

하여 핵보유를 촉진했으며, 막상 보유자가 어떠한 유효한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유혹이 높아지지만, 실제 공격하는 경우에 한국 그리고 아마도 일본과의 관계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할 것이다.

중국과 관련하여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가급적 빨리 한국의 주도 하에 남북한이 통일되는 것이 이득으로 인식되고 있다. 북한이 극도로 취약하고 중국도 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야기된 현재의 북한 위기는 미국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중국에게는 곤경이 될 수 있다. 만약 북한이 조기에 붕괴하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한국에 흡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통일한국은 내부체제가 민주적임과 동시에,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sup>39</sup> 따라서 중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지 않은 채 경제개혁을 통해 안정을 되찾고 기력을 회복하여 장기적으로 존속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국력이 충분히 신장된 10년이나 20년 후에 통일이 되는 경우, 중국은 통일과정과 통일한국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아마도 중국이 선호하는 북한핵 해결 방법은 1994년 제네바 합의와 유사한 해결책이다. 이러한 해결 방식에 의해 비핵화된 한반도에서 북한은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의 지원으로 중국식 개혁의 길을 성공적으로 밟아 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이나 일본이 이러한 해결방식을 선호하는 데 비해 미국만 이를 반대한다면, 이 또한 미국을 동맹국으로부터 고립시킬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과의 장기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미국에서는 한

---

<sup>39</sup> *Ibid.* pp. 22, 29.

국이 남북화해와 통일을 거치면서 궁극적으로 중국의 세력권에 편입될 경향이 높다는 판단이 상당한 비중으로 존재한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설정되는데, 첫째, 동아시아에서의 역사적 패턴, 둘째, 한국의 국내정치의 발전 경향 등이 그것이다.<sup>40</sup> 데이비드 강은 아시아 국가들이 대두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대항하는 균형 정책(balancing)을 취할 것을 예상하지 않는다. 과거의 역사적 패턴을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과거 동아시아에서 역사적 패턴을 보면, 중국이 강하고 안정되어 있을 때 질서가 유지되었으며, 한국은 자율성을 유지하려고 시도하는 가운데에서도 중국에 적응해야만 했다는 것이다. 미래에도 그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매우 민족주의적 국가이지만 거대하게 대두하고 있는 중국을 처리해야만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이 중국과 타협하는 수단을 찾기보다 미국의 언질에 의존하여 중국에 대해 균형정책을 취하고자 시도한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sup>41</sup> 헌팅턴 역시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 균형을 시도하기보다는 중국에 편승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중국적 동아시아 세계가 아시아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sup>42</sup>

<sup>40</sup> 이 밖에도 지리적 관점에서 논하는 것으로, Robert Ross, “The Geography of the Peace: East Asia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ternational Security*, Vol. 23, No. 4 (Spring 1999), pp. 81~118 참조. 그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충돌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대륙세력의 ‘자연스러운’ 영향력에 속하는데, 이를 해양세력인 미·일동맹의 축에 묶어 두려 할 때, 효용보다 비용만 증가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반도가 대륙세력의 영향권에 편입되는 경우, 미·일의 해양동맹에 가하는 자산감소는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이며, 오히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사이의 안정적 균형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한다.

<sup>41</sup> David Kang, “Hierarchy and Stability in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G. John Ikenberry and Michael Mastanduno, ed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Asia-Pacific*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3), pp. 163~190.

국내정치 변화와 관련하여 빅터 차는 역사를 보면, 냉전시기 동안 존재한 한국의 국내정치가 정상적인 것이기보다는 비정상적이었으며, 북한 위협감의 감소, 민주주의 발전, 세대교체에 의해, 더 젊고 부유하고 교육받은 세대가 등장했고, 이 세대에게 미국은 한국전쟁의 구원자가 아니라 과거 군사 권위주의 정권을 지지했고 한국의 수도에 군사기지를 두고 있는 거만한 동맹국으로 인식될 것이며, 따라서 한국과 미국의 거리는 더욱 멀어 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새로운 통일국가는 중국이라는 대륙세력과 타협을 추구할 것이며, 한국통일의 국내정치는 미국 군대를 한반도로부터 밀어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sup>43</sup>

그런데 이와 같은 통일한국의 중국 경사는 동북아의 민감한 세력균형을 파괴함으로써, 대결과 위기와 갈등의 잠재성을 높게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설정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민족주의의 고양, 분명하고 당면한 위협의 부재 때문에 통일 한국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완전한 철수를 요구하게 된다.…동시에 한국의 중국과의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친화성, 그리고 지

---

<sup>42</sup> Samuel P.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96), p. 238.

<sup>43</sup> Cha and Kang, *Nuclear North Korea: A Debate on Engagement Strategies*, p. 172. 그러나 한국 또는 통일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반드시 원만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존재한다. 권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의 의도는 불투명하며, 만약 다른 지역에서 중국의 관행인 것처럼 보다 ‘근육질’의 정책을 취하게 될 경우, 한국의 국내여론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통적으로 한반도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중국은 통일한국에게 일본만큼이나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이며, 한국인들도 이를 인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실령 중립적이라 할지라도, ‘민주국가’인 통일한국이 중국 국경에 곧바로 인접하게 되는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상황은 중국 지도부에게 편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Charles M. Perry and Toshi Yoshihara, *The US-Japanese Alliance: Preparing for Korean Unification & Beyond*, pp. 79~80, 107~108.

리적 현실을 배경으로 새롭게 통일된 한반도는 거대한 이웃국가인 중국과 타협하는 대륙적 타협 노선을 취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쿄는 자신이 아시아에서 유일한 미군의 전초기지라는 점에 대해 경계심을 갖게 되며, 따라서 워싱턴과의 안보유대에 대해 재고하면서 보다 독자적 노선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노령인구의 증가, 경제력의 감소와 동반하여 중국-한국의 공동보조에 직면한 일본은 자신의 취약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 간다. 이는 도쿄로 하여금 군사적으로 강한 입장을 취하도록 부추긴다. 이와 같은 모든 상황은 종합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 다중적 안보딜레마를 발생시키며, 이 때문에 모든 관계국가의 안전이 현저하게 감소하며 지역 전체가 더욱 위협해진다.<sup>44</sup>

다시 말해, 이와 같은 통일은 지역의 모든 국가에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이며, 이와 같은 상황의 도래를 막는 것이 남북화해 및 통일과 관련한 미국의 정책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게 가장 큰 우려로 간주되고 있는 문제는 두 가지이다. 첫째, 남북한 화해의 속도와 방향을 통제하고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 둘째, 통일한국의 전략적 선택이 대체로 한국인들 자신에 의해 내려질 것이라는 점이다.<sup>45</sup> 따라서 남북화해 과정, 통일 및 그 후 과정에서 미국의 전반적 정책목표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 전개가 미국의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관계를 붕괴시키는 조건을 만들어 내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미국의 가장 주요한 정책과제는 첫째, 미국의 동북아 동맹의 핵심인 일본과의 관계강화, 둘째, 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한국이 미국과 강력한 전략적 연계를 가지며 일본과도 보다 밀접하고 우

<sup>44</sup> Perry and Yoshihara, *The US-Japanese Alliance: Preparing for Korean Unification & Beyond*, pp. 104~105.

<sup>45</sup> *Ibid.*, p. 105.

호적 관계를 수립하여 아시아에서 미국에 유리한 세력균형요소로 역할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이 중국의 세력권에 끌려들어가는 자연스러운 경향을 막아내고, 한국이 미국 블록의 일부가 되어 이 블록을 더욱 강화하도록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sup>46</sup> 이를 위한 구체적 조치로서 네가지 정책이 제안되고 있다.<sup>47</sup> 첫째, 미국은 일본과 한국이 역사적 적대감과 불신을 극복하고 화해하며 진실된 동맹 또는 연합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조정자와 촉진자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일본, 미국-한국 동맹에 냉전을 넘어서는 의미와 정체성을 부여해야 한다. 셋째,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은 ‘애매 모호한’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다시 말해 미국은 미국-일본-한국 3자 주축의 공고화를 이 지역에서 미국의 존재를 재확인하는 방도로 삼아야 하지만, 동맹국에 무조건적 안보 보증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 미국-일본-한국의 3자 주축이 중국에 대해 비도발적 형태의 협력에 기초하여 공고화되도록 해야 한다.<sup>48</sup>

<sup>46</sup> Kim, Jiyul, “Continuity and Transformation in Northeast Asia and the End of American Exceptionalism: A Long-Range Outlook and US Policy Implications,”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XIII, No. 1 (Autumn 2001), p. 254; Perry and Yoshihara, *The US-Japanese Alliance: Preparing for Korean Unification & Beyond*, pp. 79~80.

<sup>47</sup> Cha and Kang, *Nuclear North Korea: A Debate on Engagement Strategies*, p. 176; Perry and Yoshihara, *The US-Japanese Alliance: Preparing for Korean Unification & Beyond*, pp. 113~115.

<sup>48</sup> 이 밖에도 ‘한반도의 평화’ 이후 미-일-한 동맹의 재편 구상에 대하여, Narushige Michishita, “Alliance After Peace in Korea,” *Survival*, vol. 41, no. 3 (Autumn 1999), pp. 68~83; 오헨론, 모치주키, 대타협, pp. 193~216.

# III

## 중국의 대북 핵정책과 한반도 구상



2차 핵위기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중국의 역할이다. 이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이 전통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역할을 선호해 온 것에 비할 때,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개입 과정에서 중국은 평양이나 워싱턴보다도 한국과의 협조를 강화하고 있다. 나아가 냉전의 종결과 함께 중국은 북한과 보다 복잡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 그 관계는 한국 및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고려와 연계되어 있다. 중국은 북한과 관련하여 미국 및 한국과 많은 이익을 공유함과 아울러 차이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모든 관계는 중국의 국력의 변화와 관련된 단기와 장기의 시간 요소에 의해서도 영향받고 있다.

## 1. 2차 핵위기와 중국의 정책

중국과 북한은 역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특수한 관계를 맺어왔다. 1,300킬로미터에 달하는 국경, 한국전쟁에서의 협력, 중국의 유일한 군사동맹, 사회주의 및 분단국가 이데올로기의 공유, 동북아와 한반도에서의 지정학적 세력균형에 대한 고려, 미국에 대한 양면적 시각의 공유 등은 지난 50년 동안 중국과 북한 관계에서 지속된 논리라고 할 수 있다.<sup>49</sup>

그러나 중국은 자신의 한반도에서의 역할을 전반적인 대외정책과 전략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조정해 왔다. 대북정책은 전반적인 중국 안보에 대한 고려에 의해 영향받아 왔다. 1950년대

---

<sup>49</sup> Andrew Scobell, *China and North Korea: From Comrades in arms to Allies at Arm's length* (Strategic Studies Institute, March 2004), p. 1.

중국은 미국을 주요 위협으로 상정하고 소련 및 북한과 협력했다. 1960년대에는 미국과의 대결 이외에도 중·소분쟁 때문에 소련에 대한 안보 우려가 대두했고, 중국은 북한이 소련에 경사하는 것을 막고자 했다. 1970년대 최우선 안보 위협은 소련이었고, 이에 중국은 미국 및 일본과 새로운 관계를 발전시키는 한편, 어려움은 있었지만 북한과의 관계를 주의 깊게 관리했다.<sup>50</sup> 1970년대 중반 미·중 관계가 개선되어 가면서, 그리고 1980년대부터 중국의 개혁이 본격화해 가면서, 두 나라 사이의 입장차는 커졌고 상호신뢰의 강도는 감소했다. 1992년 중국과 한국의 국교수립 이후 냉각되기 시작한 중·북 관계는 1994년 김일성의 사망 이후 더욱 소원해졌다. 중국과 북한 사이의 대내, 대외정책적 선호의 차이는 증가했지만, 두 나라는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기 위한 잠정합의가 필요했다. 1999년부터 두 나라는 상대방의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정책상의 선택을 존중해 주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하는 것을 바탕으로 중·북 관계는 재차 개선되기 시작했다.<sup>51</sup>

1970년대 중반 이후, 그리고 탈냉전 이후 시기에 베이징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의 기본 성격은 내용적으로는 현상의 안정과 유지였다. 1980년대 이후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이래, 중국 대외정책의 핵심 목표는 주변부를 안정하고 우호적으로 관리하며, 자신을 국제사회에 통합시켜 나간다는 것이었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중국은 선진국과 경제협력을 추진해 왔으며

---

<sup>50</sup> Yufan Hao, "China and the Korean Peninsula," Yufan Hao and Guocang Hua ed., *The Chinese View of the World* (New York: Pantheon Books, 1989), pp. 175~176.

<sup>51</sup> You Ji, "China and North Korea: A Fragile Relationship of Strategic Convenience,"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10, No. 28 (2001), p. 391.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고양하고자 노력했다.<sup>52</sup> 그러한 가운데 중국은 미국 및 한국과 관계개선을 추구하는 한편, 북한과도 전통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그런데 우호 관계를 추진하는 상대방들이 상호 적대하고 있을 때, 그들과 공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북한, 한국, 미국에 대해 모호성과 등거리 전략을 취하는 한편,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었다.<sup>53</sup> 베이징의 지도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북한이 국가로 존속하면서 동북 국경에서 중국의 전략적 완충으로서 계속적으로 기여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동아시아에서 안정되고 평화적 환경이 유지되어 중국의 경제현대화 계획이 촉진될 수 있는 것이었다.<sup>54</sup> 중국이 볼 때, 북한이 군사태세를 완화하고 경제를 개혁하며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었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 응하지 않았다. 세계가 변하고 지정학적 상황이 변화했음에도 북한의 정체성이 변하지 않는 가운데, 중국과 북한은 전통적 우호관계의 막후에서 상호 의심하는 가운데 긴장된 흥정을 해야 했다.

그런데 중국은 제2차 북한 핵위기에 대해 과거의 모호성과 소극성을 버리고 적극 개입하기 시작했다.<sup>55</sup>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sup>52</sup> Samuel S. Kim, “The Making of China’s Korea Policy in the Era of Reform,” David M. Lampton, *The Making of Chinese Foreign and Security Policy in the Era of Reform, 1978-2000*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1), pp. 371~408.

<sup>53</sup> 오진용, 김일성 시대의 중소와 남북한 .

<sup>54</sup> Chen Jian, “Limits of the ‘Lips and Teeth’ Alliance: An Historical Review of Chinese-North Korean Relations,” *Uneasy Allies: Fifty Years of China-North Korea Relations Asia Program Special Report* (Sept. 2003),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p. 10.

<sup>55</sup> 중국의 6자회담 주도 경과와 전략에 대한 것은 신상진,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전략: 중재역할을 통한 영향력 강화,” *국가전략* , 11권 2호 (2005), pp. 29~

핵개발이 바로 중국이 소중히 해오고 있는 현상을 깨버릴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었다. 상황적 이유는 박두해 있었고 실제로 벌어졌던 이라크 전쟁이었다. 이 전쟁은 중국과 북한 모두에게 중요하고 각성적인 효과가 있었다. 두 나라는 미국이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 극도로 우려했다. 이 때문에 베이징과 평양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한 어떠한 빌미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갑자기 절박하게 느끼게 되었다. 중국은 위기감에서 2003년 초 후진타오 휘하에 북한관련 소조를 추가했다.<sup>56</sup>

보다 근원적 차원에서 중국의 개입은 국제사회에서의 달라진 중국의 이해관계와 전략적 사고방식을 반영했다.<sup>57</sup> 첫째, 북한의 핵개발은 미국과의 관계 및 중국외교에 주요한 도전을 제기했다. 1994년에는 좋지 않은 상태였던 중국과 미국 관계, 중국과 북한 관계가 핵문제와 관련한 미·북관계에 대한 중국의 태도에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중국-미국 관계는 9·11 이후 반테러 협력 개시로 현저히 개선되었다. 한반도 문제는 중국과 미국이 새로이 협력을 시작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는 특히 미국이 과거와는 달리 북한핵문제 해결과 관련하

---

54 참조.

56 Scobell, *China and North Korea*, p. 13; Samuel S. Kim, "China and North Korea in a Changing World," p. 15.

57 Scobell, *China and North Korea*, p. 13; Dennis V. Hickey, "China's Relations with Japan, the Koreans, and Taiwan: Progress with Problems," China's "Good Neighbor" Diplomacy: A Wolf in Sheep's Clothing?, *Asia Program Special Report*,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January 2005); Ming Liu, "China and the North Korean Crisis: Facing Test and Transition," *Pacific Affairs*, Vol. 76, No. 3 (Fall 2003), pp. 362~363.

여 중국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또한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계획을 반대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타이완 문제에 대한 어떤 양보를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중국의 적극적 역할은 중국의 위신과 영향력을 높이는 데 기회이기도 하지만, 만약 실패할 경우에 상당한 국제적 수모를 감수해야 하는 위기를 뜻하기도 하는 것이었다. 특히 북한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중국의 능력과 수단, 의도에 매우 복잡한 고려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었다.

둘째,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이 야기하는 전략적 불안에 대해 보다 심각히 생각하기 시작했다. 북한이 핵무장하는 경우, 중국의 첫번째 우선 목표인 북한 정권의 연명이 불가능해질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중국은 특히 미국의 강경파가 평양의 핵무장을 이유로 무모하게 군사행위를 통해 북한 정권의 축출을 시도할 것에 대해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에 중국이 군사·정치적으로 말려들 수 있으며, 또는 중국으로의 북한난민 유입 등 힘겨운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그렇지 않더라도, 북한이 미국 및 한국과의 갈등에서 패배하게 되는 상태에서 미국-한국의 동맹이 유지된다면, 중국은 중요한 완충국가를 상실할 수 있었다. 또는 평양이 앞으로 언젠가는 중국에 대해 핵협박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는 북한이 수출한 핵물질이 중국 신장의 분리주의자들에게 건네질 수 있는 가능성도 포함되었다. 북한의 핵무기는 최소한 동북아에서 연쇄작용을 일으켜 일본과 한국의 핵무장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 계획을 해체하지 않으면, 미국의 동아시아 전역 미사일 방어체제 수립이 가속화될 것에 대한 우려도 작용했다.

셋째,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지속이 야기하는 경제적 비용에 대해 자각하기 시작했다. 이는 중국이 북한의 붕괴된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뿐 아니라, 한반도의 불안 장기화가 중국경제에 야기하는 잠재적 피해, 그리고 한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포함했다. 한국경제에의 부정적 영향은 한국과 중국 사이의 투자와 무역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이며, 이는 중국경제에 대한 피해로 이해되었다. 나아가, 중국 지도부의 요구에 의해 작성된 한 정책보고서는 만약 워싱턴의 비군사적인 정권교체 정책에 의해 북한이 붕괴하는 경우, 한국의 직접투자가 북한의 재건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급작스럽게 회수될 것이며, 이는 중국의 소강사회 정책에 대단한 충격을 주며, 중국 지도부가 내세운 2020년까지의 경제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sup>58</sup>

중국의 북한핵문제에 대한 개입에서의 핵심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무엇을 위해 어떠한 수단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미국이 기대하고 요구했던 것은 첫째, 베이징은 평양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영향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둘째, 북한과 관련한 중국의 목표는 워싱턴과 동일하거나 적어도 유사하다는 것이었다. 셋째, 중국이 6자회담에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북한핵의 해체에 얼마나 협력하는가의 여부가 미국 중국 관계의 핵심적 실험대라는 것이었다.<sup>59</sup>

<sup>58</sup> John S. Park, "Inside Multilateralism: The Six-Party Talks," *The Washington Quarterly* (Autumn 2005), p. 83.

<sup>59</sup> Scobell, *China and North Korea*, p. 10; The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2005 Report to Congress* (November 2005),

이러한 가정 또는 요구는 제한적으로만 타당했다. 중국이 다른 나라보다도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 영향력은 실제상 한정된 것이고 중국의 대북정책의 우선순위는 미국과 상당히 다르다. 미국과 중국이 공히 북한의 핵개발에 반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반대의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중국에게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는 것도 위험한 일이지만, 그 핵무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더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다.<sup>60</sup> 또한 나중에 더 자세히 언급할 것이지만, 중국에게는 북한 핵의 제거보다 북한정권의 존속이 더 중요하다. 또한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으로 인한 위협은 핵무장, 핵확산 위협보다는 북한이 잠재적 실패국가라는 것, 그리고 인도주의적 측면이 더 크다는 것이다.<sup>61</sup>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은 북한 정권의 붕괴를 유발할 수도 있으며, 이는 주변안정의 침해, 경제성장 방해, 북한난민 유입 등 중국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이 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과 관련하여 정치적·경제적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정치적 딜레마를 보면, 중국이 북한의 핵계획을 종결하기 위해 미국과 손을 잡으면 북한의 생존능력은 약화될 것이며, 역으로 북한을 생존시키는 데 집착하면 평양으로 하여금 핵계획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데서 상당한 장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유사한 딜레마가 중국의 대북 경제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얼핏 보기에

---

pp. 161~163.

<sup>60</sup> Liu Ming,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Sino-American Co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p. 138.

<sup>61</sup> John S. Park, "Inside Multilateralism: The Six-Party Talks," p. 83.

중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그리고 북한의 대중 경제적 의존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강력한 레버리지로 판단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베이징의 지도자들이 자의적으로 북한에게 어떤 정책 결정을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sup>62</sup> 이와 관련하여 실제상 베이징의 지도자들은 주요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그들이 경제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으면 평양은 중국의 의견을 듣지 않을 것이지만, 그들이 북한에 대한 원조를 중단한다든지 하는 등의 경제적 수단을 사용하면 이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것이며, 최악의 경우에 북한 경제와 사회의 붕괴, 그리하여 중국 자신의 이익에 커다란 피해를 입힐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분명히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과 북한의 최소 생존을 보장해야 한다는 고려 속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정부의 고위급 접촉이 있을 때마다 북한의 경제원조 요구가 주요 의제로 등장했고 그와 관련한 갈등이 있어 왔다.<sup>63</sup> 그러나 베이징은 북한의 존속에 필요한 최소한의 원조만을 제공했다. 그 목적은 중국으로 유입하는 탈북자의 감소, 잠재적인 북한 붕괴의 유예, 평양과 서울에 대한 중국 지렛대의 제고 등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중국의 원조가 베이징 자신의 이기적인 이익에 입각해서만 제공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 때문에 원조가 평양에 대한 중국의 지렛대를 높이지 못했으며, 이것이 베이징의 난처함과 좌절을 증대시켰다.<sup>64</sup> 2차 핵

<sup>62</sup> Howard M. Krawitz, "Resolving Korea's Nuclear Crisis: Tough Choices for China," *Strategic Forum*, No. 201 (August 2003), p. 3.

<sup>63</sup> 1990년대 갈등에 대해서는 Samuel S. Kim, "The Making of China's Korea Policy in the Era of Reform," pp. 384~387.

<sup>64</sup> Samuel S. Kim, "China and North Korea in a Changing World," p. 13.

위기에 직면하여 중국 지도부는 드디어 평양에 보다 명시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평양이 핵무기 계획을 폐기하는 데 주저하면, 베이징이 계속 원조를 제공하기가 심히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2003년 8월 후진타오의 평양에 대한 3개 제안에서 표명되었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자립을 달성해야 하고, 개혁해야 하며, 대량살상무기계획을 중단함으로써 주변국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sup>65</sup>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중국의 행동을 제약하는 것은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심이다. 북한은 중국이 국제적 영향력 유지와 미국 및 한국과의 협력 증진을 위한 관심 등 북한의 이익과 합치하지 않는 매우 중요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하여 북한은 중국이 자신과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할 용의, 위기 시 북한에 대한 공약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안심하지 않고 있다. 더 심한 경우에 북한은 중국이 북한에 피해를 주면서 미국 및 한국과 타협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우려할 수 있다. 이러한 의심과 우려는 북한의 역사적 기억에서 볼 때, 결코 부당한 것만은 아니다. 가장 최근의 것으로는 1990년과 1992년 사이에 북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련과 한국, 중국과 한국 사이에 국교가 수립되었고 동시에 두 나라와의 ‘우호무역’ 관계가 일방적으로 중단되었던 것, 그리고 이것이 북한에게 매우 큰 충격을 주었다는 것을 기억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공개적으로 또한 비공개적으로 현재의 위기해결과정에서 중국의 역할과 영향력을 제한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일방적 의존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sup>65</sup> Anne Wu, “What China Whispers to North Korea,” *The Washington Quarterly* (Spring 2005), p. 41.

것이다.<sup>66</sup> 그러한 맥락에서, 평양은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이 중국의 대북 발언권 증대와 연계되는 것을 회피하고자 할 것이다. 같은 원칙을 견지하면서 북한은 원조의 원천을 한국과 국제기구와 같은 여타 잠재적 원천으로 다변화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북한은 또한 중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두 주변 대국을 상호 경쟁시켜 판돈을 키우고자 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제약하는 것은 중국의 미국에 대한 의심이다. 이는 두 가지 점에서 그러하다. 첫째, 지난 연간에 그러했던 것처럼,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자 하며, 중국과 미국 관계가 악화되는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 경우, 북한은 중국에게 중요한 안보자산이 될 수 있다. 둘째, 중국이 이란, 리비아, 시리아 등 제3세계의 문제 국가와 맺어왔던 관계에서 중국의 외교적 신뢰성의 문제와 관련된다.<sup>67</sup> 전자와 관련하여 보면, 현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취약해져 있고, 핵 개발을 통해 중국의 안보 이익에 해를 끼치고 있는 북한은 중국에게 부채인 셈이다. 그러나 중국에 있어 북한은 전통적으로 동북아에서 미국과 한국에 대항하는 완충지대의 역할을 해 왔다. 물론 미국 및 한국과의 관계 개선, 군사기술의 발전에 따라 군사작전에서 거리의 중요성이 축소됨을 감안해 볼 때, 완충지대로서의 북한의 의미는 축소되었다. 그러나 만약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 북한은 한국을 다루고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는

---

<sup>66</sup> Liu Ming, "China's Role in the Course of North Korea's Transition," Ahn Choong-yong, Nicholas Eberstadt, Lee Young-sun etc., *A New International Engagement Framework for North Korea?: Contending Perspectives*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2004), p. 336.

<sup>67</sup> Krawitz, "Resolving Korea's Nuclear Crisis," p. 4.

카드로서의 역할을 재획득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요구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 감소라는 중국의 장기 목표에 부합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대일 적대감 역시 중국의 입장에서 활용될 수 있다. 후자의 관련해서 보면, 만약 중국이 대북 정책을 갑자기 바꾸고, 그 이유가 중국 안보와 관련해서라기보다는 단지 미국의 권고에 의한 경우로 비추어질 경우, 중국의 비동맹에서의 신뢰가 크게 실추될 수 있다.

이상을 총괄하여 보면, 중국의 영향력은 중국이 보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와 북한의 반응에 대한 평가, 중국이 보는 미국과의 관계 전망 등에 의해 매우 제한되어 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필시 ‘연성’ 영향력이다. 다시 말해, ‘경성’ 그리고 ‘실제’적이지 아니라, 제한되고 대체로 ‘잠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직접 압력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평양은 필시 그 영향력을 거부할 것(또는 적어도 요구된 바대로 행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 중국의 국제적 위신이 심각하게 추락할 수 있다. 중국의 영향력은 제한된 것으로서 막후에서 제안이나 권고 등을 통해 부드럽고 교묘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68</sup>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 북한에게 ‘속삭인다’는 비유는 적절하다.<sup>69</sup> 그 주요 내용은 첫째, 핵무기 계획을 종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협상하라는 것이다. 셋째, 중국이 북한의 안보 우려와 경제적 필요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무조건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북한이 행위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

<sup>68</sup> Scobell, *China and North Korea*, p. 20.

<sup>69</sup> Anne Wu, “What China Whispers to North Korea,” *The Washington Quarterly* (Spring 2005), pp. 35–48.

않으면, 중국의 지원이나 국제적 지지를 상실할 것이라는 것이다. 다섯째, 북한은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하고 중국식 개혁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 2. 중국의 한반도 구상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를 제약하는 보다 본질적인 핵심문제는 중국이 북한의 핵포기와 북한의 안정과 생존을 동시에 원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후자를 더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과 미국은 공히 북한의 핵보유를 반대하고 있지만, 중국의 대북정책은 평양정권을 안정시키고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 비해, 미국의 다수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원한다. 중국이 한반도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라고 말하곤 하는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평양정권의 존속이다. 북한이 핵으로 무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양정권의 존속보다는 덜 중요하다. 중국으로 하여금 2003년 초 직접 나서게 만들었던 것은 북한이 핵무장 국가 클럽에 가입하게 된다는 악몽 그 자체라기보다는 평양의 노선 때문에 미국이 군사행동을 취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였고 그에 의한 북한 붕괴였다.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것을 선호하지만, 핵무장한 북한과 함께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sup>70</sup>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다시 말해 평양정권의 존속은 쉬운 일이 아니다.<sup>71</sup> 한반도 또는 북

---

<sup>70</sup> Scobell, *China and North Korea*, p. 14.

한의 현재 상황은 안정되어 있지도 않고, 지역 안정이나 중국 자체의 국가안보, 경제성장 또는 기타 국가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중국의 고민은 평양정권의 붕괴과정을 분명하게 관리하기 어렵고, 아마도 불안을 야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동북아에서의 세력형세가 중국에 불리하게 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중국에게 핵심적인 과제는 안정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에게 가장 바람직한 사태의 전개 방향은 ‘현상유지’이다. 즉 중국의 입장에서 평양이 존속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보다 온화하고 부드러우며, 보다 개혁적인 북한이 되는 것이다. 중국은 여러 해 동안, 북한으로 하여금 중국 방식의 개혁을 택하도록 권해왔다. 개혁적인 북한은 경제적으로 보다 안정되고, 내부정치적으로 ‘순치되며’ 그리고 핵을 가지지 않은 북한이 될 것이다.

중국의 북한핵문제와 북한에 대한 정책입장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의 궁극적 관심이 단순하게 북한 핵계획을 중단시키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계산, 이익, 목표는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다 복잡하게 설정되어 있다. 당장에 중국이 선호하는 것은 중국에게 보다 유리하게 개선된 한반도에서의 현상유지이다. 즉 북한정권의 생존, 북한정권의 개혁, 중국과 한국 간에 보다 포괄적이고 강력한 관계의 유지와 전개, 중국의 지배적인 대한반도(남북한) 영향력 구축, 남과 북의 경제적·사회적 수단을 통한 통합과 장기적인 정치적 통일 달성, 핵계획으로부터 기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과 그 운반, 북한의 재래식 무기배치에 이르기까지 안보 문제에서 북한의 비도발적이고

---

<sup>71</sup> David Shambaugh, “China and the Korean Peninsula: Playing for the Long Term,” *The Washington Quarterly* (Spring 2003), p. 47.

책임 있는 행위의 선택 등이다.

이러한 현상의 지지는 현상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일정한 시나리오가 베이징에 유리하지 않다는 것 등의 두 가정 위에 성립해 있다. 따라서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접근은 시간 요소에 의해 크게 영향받고 있다. 변화가 중국의 이해에 맞아 떨어진다고 분명하게 인식될 때까지 중국은 현상을 선호할 것이다.<sup>72</sup> 다시 말해, 중국은 힘이 커지고 한반도에 대해 영향력을 보다 확고하게 할 때까지 시간을 벌고자 한다. 그리하여 통일한국이 미국의 지도하에 놓이지 않는 중립국가가 되기를, 또는 친미국이나 친일본이 아니라, 친중국일 수밖에 없기를 바란다.<sup>73</sup> 이러한 고려에서 중국은 현재 한반도의 두 국가 중 어느 한 국가와 그러했던 것보다도 통일된 한국과 더 깊은 관계 맺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 중국은 하나의 정책을 가지고 있다. 즉 한국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한국이 통일과정을 지배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유지(You Ji)는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전망하면서 한국과의 관계개선이 가지는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sup>74</sup> 즉,

한국은 중국의 두 가지 장기전략 목표, 즉 통일한국이 미군을 주둔시키지 않으며, 비친일적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실현시킬 수도 좌절시킬 수도 있다. 미군의 철수라는 목표가 달성되자면, 통일된 한국은 거대한 이웃인 중국으로부터 위협

<sup>72</sup> David Kerr, "The Sino-Russian Partnership and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From Hegemony to Concert in Northeast Asia," p. 426.

<sup>73</sup> Xiaoxiong Yi, "A Neutralized Korea? The North-South Rapprochement and China's Korea Policy."

<sup>74</sup> You Ji, "China and North Korea: a fragile relationship of strategic convenience," p. 396.

당하고 있다고 인식하지 말아야 하는데, 중국은 오랜 기간 한국을 지배한 적이 있었다. 두번째 목표인 비친일적 자세를 유도하자면, 중국은 한국인들의 신뢰를 얻어야 하며,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전통적 혐오를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두 목표가 달성되면, 중국을 봉쇄하려는 서방의 어떤 시도도 성공할 수 없게 된다. 그 이유는 지리적으로 중국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러시아 연방, 중앙아시아 국가, 파키스탄과 아세안의 대부분의 국가를 친구로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한국과 외교적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중국의 전략 구상에 여러 면에서 득이 된다.



# IV

## 한국 대북정책의 동맹게임과 흥정력



과거 한국과 미국은 미국 주도 하에 또는 두 나라의 공조 하에 대체로 단일세력으로서 북한에 대응해 왔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 견해차가 커지면서, 두 개의 행위자로 분화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증가했다. 2001년 부시 정부 등장 이후, 한국과 미국 간에 대북정책을 둘러싼 견해차가 심화되었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북한에 대한 정책과정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하여 각기 다른 태도를 취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 간의 정책알력과 조정의 과정으로 진행되어 왔다.

여기서는 한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에 대한 정책적 태도와 요구일 뿐 아니라, 동맹 내에서 미국과의 정책 조정 또는 흥정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주목한다. 한국과 미국 간의 흥정 과정과 결과는 한국의 대북관계, 미국의 대북관계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때, 동맹내 알력과 정책 흥정이 동맹의 유지와 장래, 그리고 적대측과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것이 서술하고자 하는 주요 관심대상이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첫째,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그 변화, 특히 ‘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북핵 해결론’이 함축하고 있는 대북관계와 대미관계를 서술한다. 둘째, 두 동맹국이 적대 측에 대한 정책을 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동맹내 게임이 적대 측과의 게임과 어떻게 얽혀 있고,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점을 기술한다. 셋째, 이러한 동맹내 흥정 과정에서 한 동맹국의 흥정 능력은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가를 한국 대북정책의 대미관계와 관련하여 규명한다.

## 1.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북핵 해결론’

노무현 정부의 ‘통일정책’은 평화번영정책이다. 이는 “북한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에서의 안보현안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면서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하는 동시에 동북아의 평화번영을 위한 협력체 창설을 주도해 나가는 것”<sup>75</sup>을 그 내용으로 한다. 애초에 이 정책은 3단계 전략으로 기획되었다. 즉 그 내용은 1단계에서는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증진의 가속화, 2단계에서는 남북협력의 심화와 평화체제 토대 마련, 3단계는 남북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의 구축이었다.<sup>76</sup> 이러한 구상은 “당장의 현안인 핵문제 해결에 정부의 노력을 집중하고 그 성공적 결과를 토대로 남북관계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구상”<sup>77</sup>을 말한다.

이 정책의 실질적이고 구체적 추진 방향은 ‘북핵 3원칙’(핵 불용,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한국의 적극적 역할)과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 병행추진’론에 입각하여 ㉠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 내실 있는 남북관계 발전, ㉢ 국민적 합의 기반 강화 등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여기서 2항의 ‘내실 있는 남북관계 발전’은 ㉠ 북핵문제 해결 및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 ㉡ 개성공단 개발, ㉢ 철도·도로 개통 추진, ㉣ 이산가족교류 정례화·제도화, ㉤ 대북지원 체계화 등으로 설정되었다.<sup>78</sup> 통일부의 자체 평

75 통일부, 통일백서 2005 (2005), p. 17.

76 통일부, 평화번영정책해설자료 (2004. 1. 8), p. 15.

77 열린정책연구원, 평화번영정책 2년: 평가와 과제 (2005. 4. 19), p. 223.

78 통일부, 『남북관계 현황 및 금년도 대북정책 추진방향』 (2004. 4. 16); 통일부,

가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 원칙은 “북핵 상황 속에서도 남북관계의 확대·발전 노력을 통해 민족화해와 남북 공동번영의 토대를 구축해 왔다.”<sup>79</sup> 또는 “북한 외무성 성명(2. 10) 등 북핵 상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진전노력을 병행,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sup>80</sup>해 왔다. 즉, “분야별 남북대화의 질적 확대, 대규모 민간공동행사의 성공적 개최, 남북경협 활성화, 대북지원의 확대 등을 통해 한반도 긴장완화와 국민경제생활 안정, 통일역량 성숙의 전기를 마련하는 데 노력해”<sup>81</sup> 온 것이다.

현 정부가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 병행추진’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지만, 이러한 추상적 원칙의 구체적 내용은 2004년 7월 이후 2005년 6월까지 남북한의 정부간 관계가 단절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한층 ‘전향적’으로 변화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 이전 시기의 대북정책 구상은 애초의 평화번영정책 구상이 밝히고 있던 바와 같이, ‘선 핵문제 해결, 후 남북관계의 심화’론과 2003년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상황 악화 시 추가적 조치 검토’와 ‘핵문제와 남북경협 연계 시사’라는 정책 맥락의 구속을 받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년여에 걸친 남북 당국간 관계의 정체, 북한의 핵보유선언 등 핵문제 악화 과정을 거치면서 ‘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북핵 해결’론으로 전환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 수단은 정동영 대통령 특사의 김정일 면담, 대북지원 증대와 남북 사회문화 교류 확대, 남북한 정

「2005년 업무추진계획」(2005. 4. 28).

<sup>79</sup> 통일부, 「출범전반기를 마친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성과와 향후 전망」(2005. 8. 26), p. 1.

<sup>80</sup> 위의 글, p. 2.

<sup>81</sup> 위의 글, p. 2.

부간 관계의 재개 등이다.

‘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북핵 해결’이라는 논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갖는다. 첫째, 북핵이 남북관계를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남북이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이 오히려 북핵문제의 해결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다시 말해, 북핵 해결, 남북협력 심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동시에 추진한다. 이를 위해 둘째,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대화수요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는 적극적인 대책으로서 개성공단사업, 금강산관광사업 등과 더불어 농업 협력, 에너지 협력 등을 북한에 제안한다.<sup>82</sup> 셋째,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도 한·미공조와 남북관계 유지의 동시병행 원칙은 확고히 견지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핵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이 대북 강경정책을 완화해야 하고 동시에 북한은 핵포기의 명확한 의지를 가져야 하는바, 한·미공조 없이 미국의 태도변화를 이끌어 내기 힘들 듯이, 역으로 남북관계의 진전 없이 북한의 입장변화를 유도하기도 어렵기 때문”<sup>83</sup>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근식은 “핵문제로 인한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남북관계의 지속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인시키고 동시에 한국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제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평화적 해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남북관계의 진전이 오히려 북한의 대남 의존성을 심화시키고 한국정부의 대북 설득 채널을

---

82 열린정책연구원, 『평화변영정책 2년』, pp. 223, 224, 225.

83 위의 글, p. 225.

확보하게 되는 것이기에 남북관계의 지속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84</sup>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한·미 갈등 감수론과 동맹 해체 위협론을 제기한다. 백학순은 “북핵문제와 관련 미국의 이익과 (한국)의 이익이 반드시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 점점 드러나지 않고 있는 이상, (한국)은 (한국)의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미 간에 예상되는 마찰과 긴장을 어느 정도 필요한 만큼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한다. 나아가 “(한국)이 남북 사이에 대화와 협상의 채널을 유지하고 북한정부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렛대를 가지고 있을 때에만 다른 나라들도 한반도 문제와 북핵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한국)의 의견과 정책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또 이를 존중하는 법”<sup>85</sup>이라고 한다. 또한 임원혁은 “(북한핵문제의 해결이 지연될 경우)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미국의 강경정책이 남북화해와 동북아 평화의 걸림돌로 인식되면서 한국의 동맹전환(Korea shift)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가능성”<sup>86</sup>이 있다는 것이다.

---

84 김근식, “북핵문제와 한국: 입장과 역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개국의 입장과 전망 (민주평통 서울평화통일포럼·한국북방학회 공동 국제학술회의, 2005. 4. 13), p. 122.

85 백학순, “북미갈등의 원인과 해법, 그리고 한국의 역할,” 남북교류협력의원모임 외,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법과 남북관계 (2005. 3. 28), p. 12.

86 임원혁, “북핵과 남북경협, 연계인가 병행인가,” 남북교류협력의원모임 외,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법과 남북관계 (2005. 3. 28), p. 23.

## 2. 한국 대북정책의 동맹게임과 적대게임

이러한 인식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북한과 미국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주도적 노력의 강화’<sup>87</sup>이다. 이러한 견해에 함축되어 있는 것은 한국이 미국을 추종 또는 그와 협력하는 확고한 동맹도 아니고, 북한의 확고한 적도 아니며, 양자 모두가 설득 또는 그것이 실패 시 (묵시적) 협박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북한을 상대로 두 개의 그러나 상호 뺄 수 없는 게임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글렌 스나이더(Glenn Snyder)의 ‘동맹의 정치학’<sup>88</sup>이 전개하고 있는 개념 중의 하나를 빌어 표현한다면, 미국과는 동맹 내부 게임을, 북한과는 적대게임을 하고 있다. 동맹은 상호 공동이익을 지속적으로 산출하기 위한 구심력 때문에 결성되었지만, 그 내부에 서로 다른 또는 서로 상충하는 이익 때문에 원심력 경향을 내포하고 있다. 구심력과 원심력 때문에 동맹 내부에서는 동맹 유지비용의 분담과 효용의 분배를 놓고 끊임없는 흥정이 벌어지게 된다. 따라서 동맹관리는 동맹국 간의 지속적 흥정과정의 과정이다. 어느 한 측의 흥정력인 비용 분담의 능력과 용의는 동맹국 상호 간에 상호 의존성과 상호 언질의 정도, 특정문제에 관한 이해관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흥정 중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 중의 하나가 공동의 또는 동맹 상대국의 적대 측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취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동맹국들은 긴장이 높고 전쟁이 가능한 몇 개의 특정문제와 관련하여 공동의 적대국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

<sup>87</sup> 김근식, “북핵문제와 한국,” p. 125.

<sup>88</sup> Glenn H. Snyder, *Alliance Politic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에 대해 흥정한다. 이러한 위기 시 동맹국간 흥정의 초점은 어느 한 동맹국 또는 동맹국 공동으로 적대 측에 대해 제기해야 하는 요구와 양보에 관한 흥정이다. 전형적으로 동맹국의 한 측(‘목표국가’)은 적대 측과 심각한 갈등을 가지고 있고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자 한다. 다른 동맹국(‘지원국가’)의 ‘목표국가’에 대한 지원의 정도에는 상이한 선택이 가능하다. 지원국가는 목표국가의 강경한 입장을 완전히 지지하는 것으로부터 양보 후에 더 부드러운 자세에 대한 지지, 지지하지 않는 것, 노골적 반대 또는 자제 등 어느 태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흥정의 결과가 어떠한가는 적대 측과의 게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지원국가’가 ‘목표국가’의 적대국가에 대한 자세를 지지할 것인가, 그렇지 아닐 것인가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 중의 하나는 ‘말려들기(entrapment)’ 또는 ‘버림받기(abandonment)’에 대한 위험이 현실화될 개연성 및 그 비용에 대한 계산이다. 말려들기는 동맹에 대한 자신의 언질 때문에 자신에게는 이해관계가 없는 동맹국의 이익 때문에 전쟁에 끌려들어가는 것이다. 동맹국은 이쪽이 지지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적대 측에 대해 보다 확고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 버림받기는 동맹국이 동맹내 현재의 관계에 대해 만족하지 않으면, 다른 파트너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89</sup> 버림받기와 말려들기의 위험은 서로 반비례의 관계이다.

버림받기를 막아내는 방법 중의 하나는 상대측에 대한 언질이나 지지를 증가하는 것이다. 상대측의 안보를 고려함으로써

---

<sup>89</sup> *Ibid.*, p. 182.

이탈하고자 하는 유혹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다. 그러나 이는 동맹국에 말려들 위험을 증가시킨다. 다시 말해, 이쪽이 더욱 확고하게 지지할 것으로 계산하고, 동맹국은 적대국과의 갈등을 버릴 때까지 확대하고, 이쪽을 그에 끌어들이는 것이다. 말려들 가능성을 막는 방법은 동맹국에 대한 언질을 희석시키거나 특정한 위기나 다툼에서 동맹국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선은 동맹국이 동맹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그리하여 이탈을 고려할 위험을 높인다. 따라서 한 가지 우려를 악화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다른 우려를 증가시킨다.<sup>90</sup>

여기서 이미 시사되어 있듯이, 위기 발생 시, ‘지원국가’의 적대 측에 대한 정책 선택은 적대 측에 대해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동맹국가에도 영향을 끼친다. 단순화하면, ‘지원국가’의 정책 선택은 두 가지이다. 첫째, ‘목표국가’의 정책에 협력하면서 적대국가에 대해서는 대결정책을 취하는 것(전략 I), 둘째, ‘목표국가’를 지지하지 않으면서 적대국가에 대해 회유 정책을 취하는 것이다(전략 II). 이러한 전략 선택은 각각 동맹내 관계, 그리고 적대국가에 관한 관계에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도표로 나타내 보면, <표 IV-1>과 같다.

<전략 I>과 관련해서 보면, 적대 측에 대한 강경, 저항 또는 강압의 전략은 동맹 내에서 이쪽의 충실성을 확인시켜주기 때문에 동맹국을 안심시키는(재확약) 경향이 있다. 따라서 동맹국이 이탈하거나 다른 동맹에 가입할 위험을 감소시킨다. 또한 동맹국들이 협조하여 적대 측에 공동으로 강경한 정책을 취하면, 적대 측을 억지하거나 강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sup>90</sup> *Ibid.*, p. 182.

<표 IV-1> 동맹게임과 적대게임 안보딜레마의 혼합

전략	가능한 결과	
	동맹게임	적대게임
I. 동맹에 협력전략: 지지 언질의 강화 적대 측에 배반전략: 확고한 입장 취하기	<p>“장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동맹국을 재확약, 버림받기 위험의 감소</li> <li>2. 충실성 평판의 개선</li> </ol>	<p>“장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적대 측을 억지 또는 굴복시킴</li> <li>2. 결의에 대한 평판을 개선</li> </ol>
	<p>“단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말려들기 위험의 증가</li> <li>2. 동맹국에 대한 흥정력 감소</li> <li>3. 편바꾸기 가능성을 미리 포기</li> <li>4. 적대 측 동맹을 공고화</li> </ol>	<p>“단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적대 측을 자극, 긴장증가, 불안 상승 소용돌이 유발</li> </ol>
II. 동맹에 배반전략: 지지하지 않음 언질을 약화 적대 측에 협력전략: 회유	<p>“장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동맹국을 제약, 말려들기 위험 감소</li> <li>2. 동맹국에 대한 흥정력 증가</li> <li>3. 편바꾸기 가능성 유지</li> <li>4. 적대 측 동맹의 분열</li> </ol>	<p>“장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갈등의 해결, 긴장의 감소</li> </ol>
	<p>“단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버림받기 위험의 증가</li> <li>2. 충실성 평판의 악화</li> </ol>	<p>“단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적대 측이 보다 확고한 자세를 취하도록 부추김</li> <li>2. 결의 평판의 악화</li> </ol>

이러한 ‘장점’과 상반하는 것이 몇 개의 ‘단점’이다. 적대 측에 대한 강경은 동맹국의 무모한 정책에 말려들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동맹국이 이쪽의 지지를 확신하고서 더욱 완고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동맹국에 동조하여 강경한 정책을 취하면, 적대 측과 긴장이 높아질 수 있고, 적대 측과 관계를 개선하는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봉쇄한다. 나아가 강경함은 적대 측을 그쪽 동맹에 더욱 다가가게 만들어 그쪽 동맹을 공고화시킬 수 있다.

<전략 II>와 관련해서 보면, 적대 측을 회유하는 전략은 동맹국의 무모한 정책을 제약하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말려들기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쪽이 적대 측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관찰한 동맹국은 위기 시 이쪽이 자신을 전면적으로 지지해 줄지 어떨지지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그리하여 적대 측을 다루는 데서 보다 조심하게 된다. 동맹국은 이쪽이 편을 바꿀 것을 고려할 수 있는 우려에서 동맹내 다툼에서 보다 타협적 태도를 취할 수 있다. 적대 측에 대한 회유는 적대 측과 한편이 될 가능성을 열어 놓게 되는데, 이는 그 자체로 바람직할 뿐 아니라 현재의 파트너에게 영향을 끼치는 데도 효과적이다. 적대 측과 갈등이 실질적으로 감소하면 동맹국에 대한 의존이 감소하게 되고, 그리하여 동맹국에 대한 흥정지렛대를 높일 수 있다. 그런데 단점의 측면에서 보면, 적대 측과의 회유적 협상은 동맹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동맹국을 제약하기 위해 지지하지 않으면, 공동의 적에 대해 이쪽만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이쪽의 결의에 대한 평판을 망칠 수 있으며 그리하여 적대 측이 더욱 완고하고 공격적 자세를 취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면, 동맹 파트너가 이쪽의 충실성을 의심하고 대안적 파트너를 찾기 시작할 수도 있다.

이처럼 <전략 I>이든 <전략 II>이든 그 어느 것도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다. 어느 전략을 선택하든지, 각각 고유한 ‘장점’과 ‘단점’을 제기하는 딜레마를 고려하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전략 I>을 선택하는 경우에 직면하게 되는 딜레마는 ‘억지와 제약’의 딜레마이다. <전략 II>의 경우는 ‘지지 대 회유’의 딜레마이다.<sup>91</sup> <전략 I>의 경우, 어느 한 국가는 적대 측을 억지하기

위해 확고성의 이미지를 유지하고자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동맹국이 지나치게 행동하는 것을 막자면, 동맹국으로 하여금 충실성을 완전히 믿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 갈등의 어느 특정 측면에만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 또는 적대 측과의 갈등을 어느 한계선을 넘어 확대하는 경우에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전략 II>의 경우 어느 한 국가는 동맹을 유지하는 것을 절실히 원하기 때문에 동맹국을 지지하면서도 다른 편에서 동맹의 적대 측과 타결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이다. 이 두 가지 목표 사이에는 분명히 긴장이 존재한다. 특히 동맹국이 타결을 원하지 않을 때 그러하다. 이 경우, 적대 측과 너무 많은 타협을 하면 동맹국을 소외시킨다. 반대로 동맹 연대가 너무 강하면 적대 측과의 합의 가능성이 낮아지며, 적대 측을 자극하여 대항동맹을 구성하거나 이쪽을 공격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스나이더의 이론 전개에 비추어 보면, 한국의 ‘남북 관계 확대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론 측의 논리 구조는 <전략 II>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측의 주장은 <전략 I>에 기반해 있는 경향이 나타난다. <전략 I>이든 <전략 II>이든 역사적으로 빈번하게 등장했던 동맹과 적대 측과의 사이에서 한 국가가 취할 수 있었던 전형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전략의 한 유형임에는 틀림없다. 물론 그것이 어떠한 전략이 되었든지 그 전략의 추진 및 옹호자들의 그러한 전략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대신 그 단점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거나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곤 한다. 정치 전술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러한 태도는 잠재적인 치명적 실패

---

91 *Ibid.*, pp. 195~196.

가능성에 대한 대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먼저 한국에서의 <전략 II> 옹호자들 사이에서도 그러한 경향이 나타난다. 즉 이들은 이러한 전략이 가지는 동맹게임에서의 장점인 ㉠ 동맹국의 강경 정책 제약 및 말려들기 위험 감소, ㉡ 동맹국에 대한 흥정력 증가, ㉢ 편바꾸기 가능성 유지 등을 거론하는 한편, 적대게임에서의 장점인 ‘갈등의 해결과 긴장의 감소’를 강조한다. 그러나 동전의 양면이라 할 수 있는 동맹게임에서의 단점인 ‘버림받기 위험의 증가’와 ‘충실성 평판의 약화’를 감수하거나 또는 지렛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한편, 적대게임에서의 단점인 ‘적대 측이 보다 확고한 자세를 취하도록 부추긴다’는 것과 ‘결의 평판의 약화’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sup>92</sup> 물론 한국의 경우에는 미국과 관련하여 버림받기의 위험에 대한 우려보다는 말려들기의 위험이 더욱 강력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즉, “한국의 일반대중과 정부 내의 다수가 가지고 있는 우려는 미국이 북한과 따로 협상타결을 하여 한국을 저버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부분적으로 미국이 평양에 대해 보다 유연한 정책을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악화되는 군사대결에 말려드는 것이다”<sup>93</sup>는 점이다.

‘남북관계 확대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론 측은 다음으로 “한·미공조와 남북관계 유지의 동시병행 원칙은 확고히 견지한다”를

<sup>92</sup> 이와는 반대로 <전략 I>을 옹호하는 측은, 미국의 강경정책에의 편승은 북한의 굴복의 가능성을 높이며 한미 동맹을 강화할 수 있다고 그 강점의 측면을 부각하는 대신, 미국의 강경정책의 부정적 결과에 말려들 수 있으며, 북한 측을 자극하여 긴장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거나,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sup>93</sup> Scott Snyder, “South Korea’s Squeeze Play,” *The Washington Quarterly* (Autumn 2005), p. 98.

강조한다. 이는 동맹국과 적대국 양쪽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전략은 동맹에 대한 지지와 적대국에 대한 회유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딜레마를 관리해야 한다. 다시 말해 부득이 동맹국과 적대 측에 대해 두 가지의 다른 신호를 동시에 보내야 한다. 적대 측에 타협적 신호를 보낸 다음에, 동맹국에는 동맹 충실성을 표명하는 것을 통해 안심시켜야 한다. 때로는 적대 측과의 적대를 강화시키거나 적대 측의 대응조치를 유발할 수도 있을 동맹 강화 조치 또는 동맹국에 대한 지지 조치를 취한 다음에는 적대 측에 재확약 조치를 취해야 한다.<sup>94</sup> 또는 공개적으로는 적대 측에 대해 확고한 억지 의사를 표명하고, 사적으로는 동맹국에 대해 자제할 것을 충고하는 것이다.<sup>95</sup>

이처럼 동맹국과 적대 측에 서로 다른 말을 하는 데에는 위험이 따른다. 이쪽이 보내는 두 가지 신호 중에서 적대 측은 회유적인 쪽만 강조해서 접수할 수 있으며, 역으로 동맹국은 억지적인 쪽만 일방적으로 청취할 수 있다. 또는 그 반대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쪽이 보내는 두 가지 신호는 양 방향에서 의도하지 않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정부의 북핵 3원칙 중에서 ‘핵불용’의 원칙과 ‘평화적 해결’의 원칙과 관련하여 미국은 ‘핵불

---

<sup>94</sup> Eberstadt와 Ferguson은 노무현 정부의 대미 및 대북 정책의 특징을 워싱턴과 평양을 동시에 달래기 위한 “이중의 유화(dual appeasement)”라 간주한다. 이러한 정책은 매우 곤혹스러운 정책으로서 모호성, 정책결정 보류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이다. 그가 볼 때, 노 대통령이 국회에 이라크에 군대를 파병을 결정하도록 압력을 넣는 동시에, 그가 새로 임명한 통일부 장관이 인도주의 비정부 단체에 대해 탈북자의 탈북을 돕지 말라고 천명하는 것도 이러한 이중의 유화의 표현이다. Nicholas Eberstadt and Joseph P. Ferguson, “The North Korean Nightmare. It’s Later Than You Think,” *The Weekly Standard* (August 20, 2004), p. 5.

<sup>95</sup> Glenn Snyder, *Alliance Politics.*, pp. 329~330.

용'의 원칙에, 북한은 '평화적 해결'의 원칙에 강조점을 두고 접수하게 되는 경우, 이 두 원칙은 양측을 보다 호전적 방향으로 부추길 수 있다. 또는 그 역으로 해석되는 경우, 양측 공히 한국에 대해 더욱 신뢰를 가지지 않게 될 수도 있다. 이 두 원칙에 관하여 미국과 북한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든지에 상관없이 한국정부가 그렇게 이해되기를 바라는 내용은 다음의 인용에 나타나 있다.

즉 북핵 불용의 원칙은 한국정부가 평화적 해결 원칙을 견지하더라도 이것이 결코 북한에게 핵개발을 용납하는 것은 아니라는 메시지로 전달됨으로써 북한이 행여라도 평화적 해결 원칙을 이유로 핵개발을 추진하지는 못하게 하는 것으로 그리고 설령 핵무기를 보유하더라도 폐기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평화적 해결 원칙은 한국정부의 북핵 불용 원칙에도 불구하고 미국에게 반드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전해짐으로써 미국이 혹시라도 북핵 불용 원칙을 믿고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려는 유혹을 방지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sup>96</sup>

'지지 대 회유'의 딜레마와 관련하여 가장 안전한 방식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동맹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재확약하고, 적대 측에 대해서는 인색하게 양보를 하는 혼합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는 동맹 해체의 위험과 적대 측과의 갈등 지속의 위험 사이에서 불편하고도 불안정한 균형점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sup>97</sup> 노무현 정부는 초기에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즉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 병행 추진'론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정책은 '남북관계를 통한 북핵문

96 열린정책연구원, 평화변영정책 2년, p. 226.

97 Glenn Snyder, *Alliance Politics*, p. 196.

제 해결'론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에서 나타나는 것은 과거 정책에 함축되어 있던 '동맹에 대한 미온적인 재확약'과 '적대 측에 대한 인색한 양보'라는 두 균형 사항 중에서 적대 측에 보다 '후한 양보'를 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통해 교착상태를 타개하고자 시도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전환은 첫째,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병행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실에서는 북핵문제에 보다 큰 비중을 둬으로써 남북관계가 제약되어 버린 결과를 초래”<sup>98</sup>했다는 것 때문에, 또는 둘째, 스콧 스나이더(Scott Snyder)가 지적하듯이 “한국의 일반 대중은 미국과 북한 사이의 긴장이 해소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데 비해, 부시 정부가 지나치고 강경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하고 도발적이며, 따라서 한국의 안정을 높이기보다는 잠재적 갈등에 말려들 위험을 높인다는 인식 등”<sup>99</sup>에 따른 반감 때문에 초래되었을 수도 있다. 어쨌든 이는 불편하고 불안정한 종래의 균형을 동맹에 불리하게 파괴하거나 또는 새로운 균형을 찾으려고 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균형점 이동 시도와 동시에, 두 가지 상반된 방향의 보완조치가 가능할 수 있다. 첫째는 균형점을 동맹국에 불리하게 이동하면서도 재확약을 통해 동맹국을 안심시키고자 시도할 수 있다. 보다 강화된 충실성 표명 또는 동맹국의 어떤 이익에 대한 강화된 지지 등을 표명할 수 있다. 둘째는 동맹국을 강압하고자 시도하는 것이다. 이는 동맹국과 갈등할 용의를 표명한다거나, 이쪽이 동맹을 이탈하고 편을 바꿀 용의가 있음을 내비치는 것이다.

<sup>98</sup> 열린정책연구원, 평화변영정책 2년, p. 222.

<sup>99</sup> Scott Snyder, “South Korea’s Squeeze Play,” p. 105.

‘지지와 회유’ 사이의 불안정한 균형, 또는 양다리 걸치기는 동맹 측과 적대 측 사이에 긴장이 낮은 경우에 유지하는 것이 더 용이하지만, 긴장이 높아지는 경우에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 위기가 아닌 시기에서는 동맹의 이익에 반하는 적대국과의 접촉 중에도 동맹 연대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긴장이 높은 상태에서는, 적대 측과의 어떠한 타결도 의심받게 되며, 동맹국 간의 연대표명이 적대 측 간의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양다리 걸치기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동맹국과 적대 측 양측 모두가 위험 회피적 행위자인 경우이다. 동맹국은 이쪽이 보내는 지지와 제약의 신호 중에서 제약의 신호를, 적대 측은 이쪽이 보내는 억지와 회유의 신호 중에서 억지의 신호를 보다 심각하게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맹국은 지지 쪽을, 적대 측은 회유 쪽을 심각하게 간주하는 경우, 역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또는 핵문제를 둘러싼 한·미관계에서 가능할 수 있는 것처럼 동맹국은 자신 쪽에는 강한 제약의 신호가 오는데, 적대 측 쪽에는 회유의 신호만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지와 회유’ 게임에서 최선의 결과는, “남북관계와 한·미관계가 상호 제약하거나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증대한다는 목표 하에 상호 선순환의 관계에 진입하도록 하는 것”<sup>100</sup>일 것이다. 그러나 때때로 적대게임과 동맹게임에서 어느 한 국가가 양측에 대해 추진하는 목표들이 너무 동떨어져서 교환(trade off)이 불가능하고, 두 의자 사이에 주저앉게 되는 최악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때 유일한 이성적 노선은 동맹국에 대한 지지이든 적대 측에 대한 회유이든 어느 한 쪽에서 최선의

100 열린정책연구원, 평화변영정책 2년, p. 225.

전략을 택하고, 다른 쪽에서 불가피한 비용을 감수하는 것이다.<sup>101</sup>

### 3. 대북정책 동맹게임내 한국정부의 흥정력

한·미동맹 내부에서 한국과 미국 사이의 동맹게임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냉전의 종결 시점을 전후로 동맹게임의 성격이 상당히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노무현 정부와 부시 정부 간에 벌어지고 있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동맹게임은 냉전 후 변화된 안보 상황이 초래할 수 있는 하나의 개연성 있는 유형의 동맹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대체로 볼 때, 냉전 시기 한국과 미국 사이의 동맹게임은 <전략 I>에 기초한 ‘억지와 제약’의 게임이었음과 동시에 한국 측은 버림받기 위협을 더욱 심각하게 여긴 반면, 미국 측은 말려들기 위협을 더욱 중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국 측의 전형적 전략은 한국의 안보 취약성을 강조함으로써 미국으로 하여금 한·미동맹에 대한 언질을 높이도록 유도하며, 위기 시 미국의 개입을 보장받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전형적으로 주한미군의 역할이 ‘인계철선’으로 설정되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다. 미국 측의 전략은 북한에 대해서는 확고한 적대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한국의 행동에 대해서는 완전한 지지를 보내지 않음으로써 말려들지 않으려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한국이 야기할 군사적 불안 행위(예를 들어 이승만의 ‘북진통일’론, 북측의 중소규모 도

---

<sup>101</sup> Glenn Snyder, *Alliance Politics*, p. 197.

발에 대한 한국 측의 보복대응 행위에 의한 확산 위험 등)에 대해서는 제약을 가했다.

냉전이 종결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동맹게임은 점차로 <전략 II>의 ‘지지와 회유’의 게임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해 가는 한편, 한국과 미국 공히 버림받기와 말려들기의 복잡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도래된 가장 큰 원인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는 경제난에 따른 북한의 위협 능력 감소와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한국에서의 북한 위협감의 급격한 감소였다. 둘째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이었다.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평가 절하는 그 동안 한·미동맹의 결속 명분을 약화시키는 한편, 중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한국에 입장에서는 미국을 대신할 수 있는 잠재적 동맹 파트너를 지평선에 등장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배경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핵문제와 대량살상무기 위협은 한국과 미국의 결속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상황적 계기로 작용했다. 그러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이 직접 협상해야 하는 불가피성은 김영삼 정부 시기 한국의 ‘버림받기’ 위협감을 증폭시켰으며, 역으로 당시 한국정부의 강경 대응을 일부 원인으로 했던 한반도의 군사적 상황 악화 가능성은 미국의 입장에서 말려들기 위험을 증가시켰다.

2002년부터 부시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공존하게 되면서 동맹 게임은 한층 악화과정을 걸었다. 미국의 부시 정부는 한국정부에 <전략 I>의 선택을 요구해 왔지만, 한국정부는 <전략 II>의 선택으로 대응했다. 한국과의 입장 차이는 동북아에서 미·일, 한·미동맹 강화를 정책 주축으로 삼고자 했던 부시 정부에 중요한 애로였다.<sup>102</sup> 이러한 차이에 부가하여 여러 사건으로 인하여 한국

과 미국 간의 감정적 상황이 악화되었다. 여기에 부가되었던 것이 주한미군 재배치와 성격 변화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 간의 사실상의 ‘동맹재협상’이었다. 이러한 전체 과정에서 한국 내의 ‘반미’ 감정의 증가는 미국 내에서 버림받기의 배신감을 증폭시켰다. 한국의 경우에는 보다 복합적으로 버림받기와 말려들기의 우려가 존재했다. 미국이 보여주었다고 보도되었던 ‘원하지 않으면 떠나겠다’라는 식의 대응, 주한미군 재배치의 시기 문제, 미군 감축의 규모와 시기 문제 등에 관한 미국의 태도는 한국 내에서의 버림받기 우려를 증폭시킨 한편, 미국의 이라크 파병 요구, 그리고 미국의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에 따른 긴장 증대와 군사적 충돌의 위협성 증가는 한국에서 말려들기 우려를 증폭시켰다. 역으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정부의 대북 유화적인 태도에 말려들어 핵개발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불량국가’ 또는 ‘악의 축’인 북한을 징벌하지 못하는 경우, ‘불량국가’에 의한 핵확산을 반대하는 미국정책의 평판이 상실됨과 함께, 미국만 소외된 채 한국과 일본의 대북관계가 개선됨으로써 동북아에서 정책 주도권 상실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함을 의미했다. 동맹게임의 악화 과정에서 미국정부가 ‘원하지 않으면 떠나겠다’고 동맹이탈을 협박하는 가운데, 한국정부는 ‘동북아 균형자’론을 거론하며 편 바꾸기 가능성을 시사함으로써 마찬가지로 동맹이탈을 시사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sup>103</sup>

<sup>102</sup> James A. Kelly, “George W. Bush and Asia: An Assessment,” Robert M. Hathaway and Wilson Lee ed., *George W. Bush and East Asia: A First Term Assessment*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2005), pp. 15~30.

<sup>103</sup> 마이클 아머코스트, “미국이 보는 ‘균형자론,’” 중앙일보, 2005년 6월 1일.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 게임에서 양 국가의 흥정력이다. 스나이더에 따르면, 동맹 내부 흥정에서 흥정력은 세 가지 일반적 요소의 함수이다. 첫째, 동맹국들의 동맹에 대한 의존도, 둘째, 동맹에 대한 언질 정도, 셋째, 흥정 대상과 관련한 이익 강도의 상이성이다. 일반적으로, 동맹에 대한 의존이 작을수록, 언질이 약할수록, 걸려있는 이익이 클수록, 한 국가의 흥정력은 커진다. 동맹 의존의 핵심은 군사적인 것이다.<sup>104</sup> 군사적 의존성은 세 가지 요소의 합성물이다. 첫째, 한 국가가 얼마나 군사지원을 필요로 하는가, 둘째, 동맹이 그러한 필요를 얼마나 충족시키는가, 셋째,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적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첫째, 둘째 사항은 자체의 군사능력이 위협 방어에 얼마나 충분한가, 적대 측과의 타결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동맹에서 언질은 두 가지 가능한 원천에 의해 발생한다. 첫째, 동맹계약에서의 언어적 약속과 추후 이에 대한 구체화, 둘째, 그 약속과는 별개로 동맹국을 도와야하는 이해관계이다.<sup>105</sup> 두 번째의 이해관계는 종종 전략적인 이해관계로서 동맹국의 자원이 적대 측의 손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이쪽이 상대측에 대해 동맹계약의 언어적 약속보다 더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이쪽이 상대 동맹국에게 지지를 철회한다고 위협하더라도, 그 위협은 믿어지기 어렵다. 또는 상대 동맹국의 이쪽에 대한 의존성이 크다 할지라도, 상대측이 자기의 자원이 이쪽에 안전에 핵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이쪽이 압력을 가해도 굴복하지 않

<sup>104</sup> Glenn Snyder, *Alliance Politics*, p. 167.

<sup>105</sup> *Ibid.*, p. 169.

을 것이다.<sup>106</sup> 흥정력 결정의 세번째 요소는 흥정대상이 되고 있는 특정 문제에 관한 양측의 이해관계이다.<sup>107</sup> 특정 흥정상황에서 ‘힘’은 동맹국들이 상대측에 징벌위협을 통해 무엇을 양보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가이다. 그러나 이 ‘힘’은 요구되고 있는 양보의 비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포기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것의 가치가 클수록, 그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의 가치가 낮을수록 해당 동맹국은 특정한 제안에 저항할 것이다. 이상의 설명을 종합하면,<sup>108</sup>

동맹 내부의 흥정에서, 각 측은 자신들의 공동이익의 실현, 궁극적으로 동맹 보존에 관한 공동이익을 폐지하거나 방해할 것이라고 위협하는데, 그 목적은 서로 갈등상태에 있는 기타 몇 가지 문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이다. 그들의 상호 의존성은 그 관계를 종결했을 때 각 측에 입힐 수 있는 피해의 정도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 이러한 위협을 실행할 수 있다는 신뢰성은 의존성과 언질의 확고함 정도에 의해서만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흥정대상이 되고 있는 문제에 얼마나 강력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의해서도 달라진다. 스스로 피해를 감수하고자 하는 의사, 다른 측의 위협에 직면하여 버티고자 하는 결의의 정도는 그들의 의존성, 언질, 갈등문제에 관한 이해관계의 혼합에 의해 달라진다. A의 의존성과 언질의 정도가 약해서 더 강력하다고 해도, B의 해당문제에 대한 이해관계가 크면, A의 힘은 상쇄될 수 있다.

동맹내 각 국가의 흥정력은 다음과 같은 흥정력 지표를 통해 측정될 수 있다. 해당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가 높을수록, 동맹국에의 의존성이 낮을수록, 동맹에의 언질이 낮을수록 협상력이 커

<sup>106</sup> *Ibid.*, p. 170.

<sup>107</sup> *Ibid.*, p. 170.

<sup>108</sup> *Ibid.*, p. 170.

지기 때문에 높은 점수가 부과되어 있다. 이 세 가지 사항의 총합이 클수록 흥정력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sup>109</sup> 이해관계 항목은 입장을 고수할 때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의존성과 언질은 무엇을 상실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점수를 합친 총합은 합의 불가능 또는 동맹붕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장을 고수하고자 하는 위험 감수 용의를 보여준다. 이는 상대측의 위험 감수 용의와 상호 작용한다. 상대측 상황에서 세 가지 요소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관찰을 보면, 만약 상대측이 자기 의사를 관철하지 못했을 때도 입장을 고수하고 동맹을 파탄시킬지 여떨지를 알 수 있다.

<표 IV-2> 동맹 흥정력의 요소들에 대한 점수 부여

	이해관계	의존성	언질
높음	3	1	1
중간	2	2	2
낮음	1	3	3

여기서는 핵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한국과 미국의 점수를 비교해 보자. 먼저 핵문제 타결의 이해관계이다. 핵문제의 진행과 해결의 경과는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더 폭넓고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이 미국보다 이해관계가 높다고 판단될 수 있다(한국 3, 미국 2). 다음으로 한국과 미국의 상호에 대한 의존성의 문제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북한에 대한 방어 능력과 관련

<sup>109</sup> *Ibid.*, pp. 174~176.

한다. 한국의 미국에 대한 의존성은 과거와 비교할 때 소멸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역으로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위와 관련해서 한국의 동의와 협조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국제관계에서 이해관철과 관련하여 부시 정부의 미국은 전통적 동맹관계보다는 ‘뭉칠 뜻이 있는 동맹’(coalition of the willing)을 선호하고 있다(한국 2, 미국 2). 셋째로 동맹에의 언질이다. 북한과의 긴장완화 및 중국과의 관계개선으로 한국의 미국에 대한 동맹언질은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군사기술의 발전, 미국의 대테러 중심 전략 때문에 미국의 한국에 대한 언질도 약화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전략적 이해관계이다. 다시 말해 미국의 중장기 동북아 구상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치이다. 미국에서 현재까지 발상의 주류는 미·일·한 동맹의 공고화를 최선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한국 2, 미국 1.5, 제II장 참조).<sup>110</sup> 이를 총합하면, 한국 7, 미국 5.5로서, 적어도 한국의 정책 방향이 미국에 대해 흥정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명백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sup>111</sup>

이러한 흥정력에 대한 고려와 계산은 단기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동맹 흥정은 단기적 이득뿐 아니라, 장기 예상 가치에 관한 흥

<sup>110</sup>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일본은 핵심적 위치를 차지한다. 한국은 미일동맹이 확고하게 유지되는데 봉사해야 하는 보조물로 인식된다. 다시 말해, 미국과 한국과의 동맹은 미일동맹과 비교할 때, 부차적이며, 따라서 경우에 따라 해체되더라도, 그 피해는 아쉽지만 감수할 수 있는 피해로 인식된다(제II장 참조).

<sup>111</sup> Snyder에 따르면, 2이상의 점수 차이가 나는 경우, 흥정의 결과는 대체로 점수가 많은 쪽에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여기서 각 항목에 대한 점수는 매기는 사람의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기편에 관한 점수매기가 타방에 관한 것보다 용이하고 정확하다.

정이기도 하다. 단기적 흥정력과 관련해서 한국이 유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 흥정력에 관해서 한국이 반드시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 동맹국은 동맹에 대한 장기 예상 가치, 그 장기적 의존성을 적대국에 대한 전략 선택에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다. 그러나 동맹국들이 어떠한 정책을 취하든지, 위기의 결과가 어떠한 것이든지 동맹의 장기적 관계는 영향을 받을 것이다. 스나이더의 말을 빌리자면,<sup>112</sup>

함께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이것이 승리로 연결된다면, 동맹은 아마도 강화될 것이다. 합의의 실패, 그로 인한 패배는 동맹을 약화시킬 것이다. 동맹국들이 책정하는 총 이득은 적대국과의 단기적 갈등에서 실현되는 가치와 함께, 상대방이 미래에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믿음의 정도와 같은 사항과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동맹 가치가 증가했는가 감소했는가도 포함한다.

---

112 Glenn Snyder, *Alliance Politics*, p. 180

# V

## 결론: 핵위기와 그 이후의 한·미동맹과 중국



미국과 중국은 냉전기 동안 한국을 미국의 세력권, 북한을 중국의 세력권으로 간주하여 왔다.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에서 남북한 사이의 갈등에 의해 야기되는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한반도에서의 안정의 유지를 위하여 긴밀히 협력해 왔다. 이러한 관계는 한국과 중국,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적대관계가 유지되는 한에서 지속되는 데 문제가 없었다. 북한은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중국을 중재자로 하여 미국과 관계 개선을 시도했지만, 중국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았다.

이러한 전통적 구조는 냉전의 종결과 함께 변화하기 시작했다. 북한과 미국은 북한 핵개발 문제를 놓고 직접 협상하기 시작했으며, 1994년 제네바 합의에서는 관계정상화를 최종 목표로 설정하기도 했다. 나아가 한국과 중국은 경제관계의 급성장과 함께, 관계를 점차 증진해 갔다. 중국과 한국의 관계 증가에 따라 중국과 북한 관계는 오랜 동안 냉각기를 거치면서 1999년에 들어서야 개선되기 시작했다. 북한과 미국과의 직접 협상하는 문제를 놓고 김영삼 정부와 클린턴 정부는 갈등했지만, 김대중에 정부 들어서 한국은 미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을 지지하게 되었다.

남과 북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남북관계에서의 긴장완화는 동북아에서 전통적 안보 구조에 대한 도전을 제기했다. 전통적 안보구조는 내부에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정태적이고 안정적이었다. 이 구조는 미국 주도의 동북아 관리를 보장해주는 한편, 그 속에서 중국의 자리도 마련해 주고 있었다. 그런데 2000년의 남북정상회담과 그 이후의 남북관계 진전과 그에 따른 긴장완화는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우려를 안겨 주었다. 그 핵심 내용은 한반도문제에 관하여 미국과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나 북한이 주

도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방향이 전통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야기하며, 또한 자신들의 중장기 구상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였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 모두 남북 주도의 변화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구 질서에서 더 많은 기득권을 향유하고 있던 미국이 더욱 강한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했다. 실로 미국은 50년 이래 최초로 한반도문제에 관하여 외교적 주도권을 한국에게 상실했다.<sup>113</sup> 나아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또는 남북정상회담을 전후로 동북아에서는 지역 국가들 사이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은 상호 행위가 증가했다. 2000년 일본은 영토문제 해결을 위해 러시아를 설득하고 있었고, 중국은 일본에 ‘미소’를 보내고 있었으며, 한국은 중국을 만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러시아는 북한과 관계를 강화했다.

부시 정부는 이러한 새로운 지정학적 상황의 진전을 중단시키고 동북아와 한반도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하고자 했다.<sup>114</sup> 이는 클린턴 정부의 선의적 방관자세와는 크게 대비되는 것이었다. 부시 정부의 시도는 단기적으로 미국에게 성공적이었고 이익이 되었다. 남북한관계는 2001년 3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2002년 4월 임동원 특사의 방문 시까지 정체되었다. 또한 미국과 북한 관계 역시 북한이 먼저 미국의 정책 관심에 순응해야 관계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는 원칙 하에서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는 게임으로 변화하였다. 그런데 4월 이후 남북관계 재개에 이은 2002년 9월

---

113 Kent E. Calder, “U.S. Foreign Policy in North East Asia,” pp. 225~248.

114 Gilbert Rozman, *Northeast Asia's Stunted Regionalism: Bilateral Distrust in the Shadow of Global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pp. 292~301.

의 고이즈미 일본 수상의 북한 방문은 절박한 새로운 도전을 제기했다. 일·북 정상회담에 이어 일·북관계가 개선된다면, 동북아 안보질서의 핵심 요소인 미국 주도의 북한 봉쇄 체계가 심각하게 약화되고, 동북아에서 미국의 고립이 한층 심화될 가능성이 대두했다. 이는 미국이 동북아 또는 한반도에 대한 정책 선택의 주도권을 현저히 상실하며, 다른 국가의 정책 선택을 추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또한 이는 북한이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고 비밀스런 농축행위에 대해 대가도 치루지 않은 채, 상당한 돌파구를 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sup>115</sup>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일본 및 한국과 관계를 동시에 개선하는 것은 분명히 커다란 이득이 되는 상황이었다. 즉 북한은 한국과 일본과의 교역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경화원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가능해진 경제적 혜택을 통해 북한 엘리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한편, 일반 시민에 대한 엄격한 통제 유지에 활용되어 오던 국가적 포위 의식을 정당화할 만큼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sup>116</sup>

2차 핵위기와 제네바 합의의 해체는 미국이 특히 전략적 차원에서 운신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 주는 한편, 미국의 동맹국들이 독자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정책 선택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었다. 이러한 미국의 운신 폭 확대는 한국과 일본 등 지역 동맹국가의 이익을 침해하고 획득된 것이었다. 이는 미국이 인식하기에

<sup>115</sup> Jonathan D. Pollack, “The United States, North Korea, and the End of the Agreed Framework,” p. 30.

<sup>116</sup> Michael Horowitz, “Who’s Behind That Curtain? Unveiling Potential Leverage over Pyongyang,” p. 40.

우선적인 전략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 동맹국이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정책이었다. 그런데 한국의 햇볕정책과 마찬가지로 고이즈미 일본 수상의 독자적 대북정책 시도 역시 동아시아에서 미국과의 동맹체계를 붕괴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아니었지만, 동맹체계 내에서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 사이에 이해관계의 상이 존재하고, 미국의 입장과는 다르게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 이익을 실현해보고자 시도할 수 있는 의사가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sup>117</sup>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급진전은 중국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려를 야기했다. 그 핵심은 “중국은 한반도에서 급격한 (남북)관계 개선과 평양과 워싱턴을 더 가깝게 만들도록 하는 한국의 노력이 현존하는 동북아 세력균형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기”<sup>118</sup> 때문이었다. 여기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당시 중국의 입장은 남북관계 개선은 바라지만, 미국-북한 간의 관계 개선은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 개선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기본적 전략 목표인 한반도에서 현상을 유지하고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감소하고 봉쇄하는 것”에 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연관된 목표 추진에 가장 좋은 것은 “두 한국 간의 화해 노력을 환영하고 북돋우면서도 북한과 미국이 진실된 관계개선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sup>119</sup>이었다. 중국은 특히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이 통일 이후에도 주

<sup>117</sup> David Kerr, “The Sino-Russian Partnership and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p. 425.

<sup>118</sup> Xiaoxiong Yi, “A Neutralized Korea? The North-South Rapprochement and China’s Korea Policy,” p. 97.

<sup>119</sup> *Ibid.*

한미군을 인정할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다. 중국정부의 공식 입장은 미군의 한국 주둔을 ‘강력히 반대’하는 것인데, “북한이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수용한 것은 냉전기 동안 김일성이 중·소를 대립시켰던 것과 같은 낡은 게임을 재탕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중국이 한반도에서 원하는 것은 “현상을 유지하고, 남북한 간의 평화공존을 촉진하며, 남북한에 대해 베이징의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것”,<sup>120</sup> 또한 “남북관계 개선이 미국과 한국의 군사동맹에 압력을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워싱턴이 한국에 덜 의존하는 것”<sup>121</sup>인데, 남북한의 독자적인 모색은 중국의 이러한 목표 추진에 장애가 된다고 보고 있었다.

남북관계의 급격한 진전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우려를 놓고 볼 때, 제2차 핵위기와 6자회담의 성립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사태 전개에 대하여 미국과 중국이 다시 한 번 상호 협의 하에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의 천명과 그에 부합하는 구조의 수립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2001년 부시 정부 등장 이후, 한국과 미국 간의 대북정책 격차,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 4월 이후 재개되었던 남북한 사이의 새로운 관계개선 시도는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의 정책 방향에 대한 통제를 확신할 수 없게 만들었다. 클린턴 시대에서처럼 미·한·일 공조를 배경으로 한 북한과의 직접 협상을 기획할 경우, 그러한 협상은 북한과의 협상 이전에 한국과의 정책 공조에서 끊임없는 마찰을 야기했을 것이다. 또한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북한의 농축우라늄 시도 또는 북한이 2차 핵위기 이후 보여주었던 매우 강경한 핵정책과 대미 정책은 한반

---

<sup>120</sup> *Ibid.*, p. 113.

<sup>121</sup> *Ibid.*, p. 112.

도 위기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북한을 통제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122</sup> 남북한에 대한 전통적 기득권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이 함께 지휘봉을 잡음으로써 한국과 북한의 주도권에 의한 이익 침해를 방지할 수 있고, 나아가 일본과 같은 ‘새로운 참가자’의 한반도 변화 과정에의 참가 조건을 결정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동의 지휘봉 체제 하에서 미국보다는 중국의 중장기적인 전략 이득이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그 이유는 중국이 견지하고 있는 대북정책의 방향과 정책이 적어도 부시 정부 1기 때에는 한국, 일본, 러시아와 북한의 정책 지향과 더 부합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sup>123</sup> 특히 대북 핵정책에서 한국과의 견해의 일치 폭은 미국과의 일치 폭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난다. 대화와 협의에 의한 해결의 원칙, 북핵 위기 속에서 평양 정권에 대한 교류와 지원의 용의, 중장기적으로 평양 정권의 존속에 관한 이익의 일치 등에서 그러하다. 이러한 입장은 사실상 북한핵 폐기를 절대시하고 우선시하기보다는, 결국에 핵 모호성을 구사하는 북한과도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

<sup>122</sup>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은 2003년 10월 우방귀의 평양방문에서 중국과 북한 관계의 4원칙을 제시하고, 북한의 행위를 통제하고자 했으나 성공했다고 볼 수 없었다. 그 4원칙은 첫째, 전통을 견지하고, 둘째, 미래를 바라보며, 셋째, 좋은 이웃관계와 친선관계를 유지하고, 넷째,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첫째와 셋째 원칙의 메시지를 보다 명확한 언어로 표현하면, 첫째, 김일성 시대에 그러했던 것처럼, 베이징은 평양이 국제적 관심과 중국의 이익과 관련된 북한의 중요한 행위와 결정에 대해, 중국에 미리 알려주는 것을 바란다. 셋째, 북한은 중국과 기타 국가의 안보와 이익을 해치는 일방적 정책을 결코 취해서는 안되며, 북한은 핵계획의 폐기에 대한 중국의 관심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Liu Ming, “China’s Role in the Course of North Korea’s Transition,” pp. 338~339.

<sup>123</sup> David Shambaugh, “China and the Korean Peninsula: Playing for the Long Term,” p. 54~55.

은 미국과의 갈등을 함축하고 있는 동시에, 미국이 동북아에서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할 가능성도 열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124</sup> 즉 북한은 핵능력을 보유하고, 여러 핵심적 문제들에서 미국이 협력을 필요로 하는 동북아의 주요 국가들과 미국과의 관계가 심각한 긴장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은 단기적 북한핵문제 처리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남북한 또는 한반도에 대한 주도적인 영향력의 행사 여부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고려와 행마가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점이다. 미국과 중국이 제시한 선택은 이미 알려져 있고 명백하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조기 통일이 좋은데, 그 이유는 조기통일을 달성할 경우에 중국보다는 미국과 더 친밀한 한국 주도의 '친미적' 통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통일 한국은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일본과도 밀접한 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현 상태의 남북한 공존이 상당한 기간 동안 진행되는 가운데, 북한이 한국과 일본 등의 지원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정상화되고, 그러는 동안 중국의 남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충분히 강화된 다음에, 중국의 그늘 아래서 남북한이 통일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5년 말 현재의 상황은 미국의 이러한 전략 구상에 유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한국의 대북정책이 중국의 그것과 오히려 친화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반면, 한국과 일본이 쉽게 가까워질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과 미국이 갈등하고 있는 동안,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배후에서 관계개선을 위한 중재력을 행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한국

---

124 *Ibid.*, p. 55.

은 단기적으로 자신의 결의를 과시하고 동맹침해의 위험을 감수함으로써 미국의 강경정책을 제약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보다 치명적인 불신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상황의 맥락 자체가, 따라서 전략사고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 6자회담의 전개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은 다른 네 나라와 협력하여 보다 덜 갈등적인 차원에서 미래의 동북아 안보 틀에 합의해 나갈 수도 있다. 북한핵문제의 전개를 볼 때, 적어도 동북아에서는 어느 한 나라도 압도적인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sup>125</sup> 또는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에서 각자의 전통적 영향력을 새롭고 보다 선명하게 재확보하기 위해 남한과 북한의 양 어깨를 넘어 합의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동북아에서의 새로운 질서 구축을 향해 나갈 수 있다.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 및 북한 유발의 안보우려 해소, 북한 내정의 안정적 관리에서 주도적 역할을 행사하는 가운데, 미국은 북한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한편, 반대로 중국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존중하며, 이를 한국에게도 묵시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은 이를 수용하는 것도 거부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다.

---

125 David Kerr, "The Sino-Russian Partnership and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pp. 411~437.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 열린정책연구원. 평화번영정책 2년: 평가와 과제 . 2005. 4. 19.
- 오진용. 김일성 시대의 중소와 남북한 . 서울: 나남출판, 2004.
- 통일부. 통일백서 2005 . 서울: 통일부, 2005.
- 마이클 오웬론, 마이크 모치주키. 대타협: 북한 vs 미국, 평화를 위한 로드맵 . 서울: 삼인, 2004.
- Joel S. Witt 외, 북핵위기의 전망: 벼랑끝의 북미협상 . 서울: 모음북스, 2005.
- 주지안룡. 모택동은 왜 한국전쟁에 개입했을까? . 서울: 역사넷, 2005.
- Ahn, Choong-yong. Nicholas Eberstadt and Lee Young-sun. *A New International Engagement Framework for North Korea?: Contending Perspectives*.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2004.
- Alagappa, Muthiah ed. *Asian Security Practice: Material and Ideational Influenc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 Cha, Victor D. and David C. Kang. *Nuclear North Korea: A Debate on Engagement Strateg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3.
- Hao. Yufan and Guocang Hua ed. *The Chinese View of the World*. New York: Pantheon Books, 1989.
- Hathaway, Robert M. and Wilson Lee ed. *George W. Bush and East Asia: A First Term Assessment*.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2005.
- Huntington, Samuel P.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96.
- Ikenberry, G. John and Michael Mastanduno eds. *International*

- Relations Theory and the Asia-Pacific*.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3.
- Jervis, Robert. *System Effects: Complexity in Political and Social Lif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1997.
- Jian, Chen.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 The Making of the Sino-American Confront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 Kim, Samuel S. and Tai Hwan Lee eds. *North Korea and North East Asia*.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2.
- Kim, Samuel S. ed.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North East Asia*.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4.
- Lampton, David M. *The Making of Chinese Foreign and Security Policy in the Era of Reform, 1978-2000*.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1.
- Lee Wilson etc. ed. *U.S. Strategy in the Asia-Pacific Region. A Conference Report*.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2003.
- Niksch, Larry A.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Updated September 28, 2004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Perry, Charles M. and Toshi Yoshihara. *The US-Japanese Alliance: Preparing for Korean Unification & Beyond*. Herndon: Brassey's Inc., 2003.
- Rozman, Gilbert. *Northeast Asia's Stunted Regionalism: Bilateral Distrust in the Shadow of Global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 Scobell, Andrew. *China and North Korea: From Comrades in Arms to Allies at Arm's length*. Strategic Studies Institute, March 2004.
- Snyder, Glenn H. *Alliance Politic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 The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2005 Report to Congress*. November 2005.

## 2. 논문

- 김근식. “북핵문제와 한국: 입장과 역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개국의 입장과 전망 (민주평통 서울평화통일포럼·한국북방학회 공동 국제학술회의, 2005. 4. 13).
- 백학순. “북미갈등의 원인과 해법, 그리고 한국의 역할.” 남북교류협력의 원모임 외.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법과 남북관계 (2005. 3. 28).
- 신상진.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전략: 중재역할을 통한 영향력 강화.” 국가전략 . 11권 2호, 2005.
- 임원혁. “북핵과 남북경협, 연계인가 병행인가.” 남북교류협력의원모임 외.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법과 남북관계 (2005. 3. 28).
- Bailey, Marta J. “Another Engagement Strategy for North Korea.” *PFO 04-31*. Nautilus Institute: August 16, 2004.
- Bradner, Stephen. “North Korea’s Strategy.” Henry D. Sokolski ed. *Planning for a Peaceful Korea*. Carlisle Barracks, PA: U.S. Army War College, Strategic Studies Institute, 2001.
- Calder, Kent E. “U.S. Foreign Policy in North East Asia.” Samuel S. Kim ed.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North East Asia*.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4.
- Cha, Victor D. “Hawk Engagement and Preventive Defense on the Korean Peninsula.” *International Security*. Vol. 27, No. 1, Summer 2002.
- Cha, Victor D. and David C. Kang. “Can North Korea be Engaged? An Exchange between Victor D. Cha and David C. Kang.” *Survival*. vol. 46, no. 2, Summer 2004.
- Drennen, William M. “A Comprehensive Resolution of the Korean War.” *Special Report* 106. Washington: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May 2003.
- Eberstadt, Nicholas. “Alternative Scenarios for the Korean Peninsula.” *Strategic Asia* 2004/05.

- \_\_\_\_\_. "A Turn of the Screw." *On the Issue, AEI Online*. March 1, 2003.
- \_\_\_\_\_. "North Korea's Survival Game: Understanding the Recent Past, Thinking about Future." Ahn Choong-yong, Nicholas Eberstadt, Lee Young-sun. *A New International Engagement Framework for North Korea?: Contending Perspectives*.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2004.
- \_\_\_\_\_. "North Korea's Weapons Quest." *The National Interest*. Summer 2005.
- Flake, L. Gordon. "The Coming Crisis in Korea: a Rubicon Crossed." *Asia-Pacific Review*. Vol. 10, No. 2, 2003.
- Friedberg, Aaron L. "U.S. Strategy in Northeast Asia: Short and Long-Term Challenges." Wilson Lee etc. ed. *U.S. Strategy in the Asia-Pacific Region. A Conference Report*.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2003.
- \_\_\_\_\_. "The Struggle for Mastery in Asia." *Commentary*. November 2000.
- Hao, Yufan. "China and the Korean Peninsula." Yufan Hao and Guocang Hua ed. *The Chinese View of the World*. New York: Pantheon Books, 1989.
- Hickey, Dennis V. "China's Relations with Japan, the Koreans, and Taiwan: Progress with Problems," China's "Good Neighbor" Diplomacy: A Wolf in Sheep's Clothing?" *Asia Program Special Report*.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January 2005.
- Horowitz, Michael. "Who's Behind That Curtain? Unveiling Potential Leverage over Pyongyang." *The Washington Quarterly*. Winter 2004/05.
- Ji, You. "China and North Korea: A Fragile Relationship of Strategic Convenience."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10, No. 28, 2001.
- Jian, Chen. "Limits of the 'Lips and Teeth' Alliance: An Historical

- Review of Chinese–North Korean Relations.” *Uneasy Allies: Fifty Years of China–North Korea Relations Asia Program Special Report*.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Sept. 2003.
- Kang, David. “Hierarchy and Stability in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G. John Ikenberry and Michael Mastanduno ed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Asia-Pacific*.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3.
- \_\_\_\_\_. “North Korea: Deterrence through Danger.” Muthiah Alagappa ed. *Asian Security Practice: Material and Ideational Influenc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 \_\_\_\_\_. “The Avoidable Crisis in North Korea.” *Orbis*. Summer 2003.
- Kelly, James A. “George W. Bush and Asia: An Assessment.” Robert M. Hathaway and Wilson Lee ed. *George W. Bush and East Asia: A First Term Assessment*.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2005.
- Kerr, David. “The Sino–Russian Partnership and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From Hegemony to Concert in Northeast Asia.”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2005.
- Kim, Jiyul. “Continuity and Transformation in Northeast Asia and the End of American Exceptionalism: A Long–Range Outlook and US Policy Implications.”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XIII, No. 1, Autumn 2001.
- Kim, Samuel S. “China and North Korea in a Changing World.” *Uneasy Allies: Fifty Years of China–North Korea Relations, Asia Program Special Report*.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Sept. 2003.
- \_\_\_\_\_. “The Making of China’s Korea Policy in the Era of Reform.” David M. Lampton. *The Making of Chinese Foreign and Security Policy in the Era of Reform, 1978–2000*.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1.

- Krawitz, Howard M. "Resolving Korea's Nuclear Crisis: Tough Choices for China." *Strategic Forum*. No. 201, August 2003.
- Michishita, Narushige. "Alliance After Peace in Korea." *Survival*. vol. 41, no. 3, Autumn 1999.
- Liu Ming, "China and the North Korean Crisis: Facing Test and Transition." *Pacific Affairs*. Vol. 76, No. 3, Fall 2003.
- \_\_\_\_\_. "China's Role in the Course of North Korea's Transition." Ahn Choong-yong, Nicholas Eberstadt, Lee Young-sun etc. *A New International Engagement Framework for North Korea?: Contending Perspectives*.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2004.
- \_\_\_\_\_.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Sino-American Co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XVI, No. 1, Spring 2004.
- Park, John S. "Inside Multilateralism: The Six-Party Talks." *The Washington Quarterly*. Autumn 2005.
- Pollack, Jonathan. "The United States, North Korea, and the End of the Agreed Framework." *Naval War College Review*. Vol. LVI, No. 3, Summer 2003.
- Quinones, C. Kenneth. "Dealing with Pyongyang: In Search of a More Effective Strategy."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4, No. 1.
- Ross, Robert. "The Geography of the Peace: East Asia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ternational Security*. Vol. 23, No. 4, Spring 1999.
- Samore, Gary. "The Korean Nuclear Crisis." *Survival*. vol. 45, no. 2, Spring 2003.
- Shambaugh, David. "China and the Korean Peninsula: Playing for the Long Term." *The Washington Quarterly*. Spring 2003.
- Snyder, Scott. "South Korea's Squeeze Play." *The Washington Quarterly*. Autumn 2005.

Wu, Anne. "What China Whispers to North Korea." *The Washington Quarterly*. Spring 2005.

Yi, Xiaoxiong. "A Neutralized Korea? The North-South Rapprochement and China's Korea Policy." *The Korea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XII, No. 2, Winter 2000.

### 3. 기타

통일부. 「남북관계 현황 및 금년도 대북정책 추진방향」 (2004. 4. 16).

\_\_\_\_\_. 「2005년 업무추진계획」 (2005. 4. 28).

\_\_\_\_\_. 「출범전반기를 마친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성과와 향후 전망」 (2005. 8. 26)

\_\_\_\_\_. 「평화변영정책해설자료」 (2004. 1. 8).

마이클 아머코스트 "미국이 보는 '균형자론'" 중앙일보 , 2005년 6월 1일.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연구총서

2003-01	북한의 인권부문 외교의 전개방향	최의철	저	6,000원
2003-0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이우영	저	5,000원
2003-03	『조선녀성』 분석	임순희	저	6,000원
2003-04	북한의 개인숭배 및 정치사회화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서재진	저	6,500원
2003-05	21세기 미, 중, 일, 러의 한반도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여인근 외	공저	8,500원
2003-06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	이현경	저	5,000원
2003-07	일본의 군사안보전략과 한반도	김영춘	저	4,000원
2003-08	중국의 한반도 안보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최춘흠	저	3,500원
2003-09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전략	박영호 외	공저	8,500원
2003-10	핵문제 전개 및 내부 정치변동의 항배와 북한 변화	박형중	저	7,000원
2003-11	미국의 대이라크전쟁 이후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5,000원
2003-12	북한의 후계자론	이교덕	저	4,500원
2003-13	김정일 정권의 안보정책: 포괄적 안보개념의 적용	박영규	저	5,500원
2003-14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전현준	저	4,000원
2003-15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북관계 및 북한 경제지원 시나리오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3-16	통일에측모형 연구	박영호 외	공저	8,000원
2003-17	동북아 안보·경제 협력체제 형성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3-18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3-19	북한 재산권의 비공식 이행	임강택 외	공저	5,000원
2003-20	북한 노동력 활용방안	최수영	저	3,500원
2003-21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	이금순	저	5,500원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공저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운	저	7,500원
2004-09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2004-10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김수암	저	6,000원
2004-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4-12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영호	저	5,500원
2004-13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공저	6,000원

2004-14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저	7,500원
2004-15	CSCF/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2004-16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2004-17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여인곤	외 공저	9,000원
2004-18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저	5,000원
2004-19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4-20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 석	저	9,000원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운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 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 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3	서재진 외 공저	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3</i>	서재진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 연례 정세 보고서

200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3~2004	6,000원
200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4~2005	6,000원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 학술회의총서

2003-01 신정부 국정과제 추진방향	5,000원
2003-02 한반도 평화번영과 국제협력	5,500원
2004-01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10,000원
2004-08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과 한·중 협력	9,000원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2권 1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2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2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1 (2003)	9,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2 (200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1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2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1 (2005)	10,000원

## 영문초록

2003-1 KINU Research Abstracts '02	10,000원
------------------------------------	---------

## 협동연구총서

2003-01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			10,000원
2003-02	통일정책 추진체계 실태연구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3-03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적 영향	최진욱 외	공저	10,000원
2003-04	법·제도분야 통일인프라 실태 연구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3-05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3-06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 경제분야	이상만 외	공저	10,000원
2003-07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3-08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조사	박영규 외	공저	9,000원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2	정보화시대 통일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여인곤 외	공저	7,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4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성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2004-08	종합결과보고서: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	김영춘 외	공저	5,500원
2004-09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10,000원
2004-1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오명석 외	공저	5,500원
2004-11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김명섭 외	공저	5,000원
2004-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중국·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양영균 외	공저	10,000원
2004-13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	박경하 외	공저	10,000원
2004-14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동남아 문화 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서중석 외	공저	10,000원
2004-15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조한범 외	공저	9,500원
2004-16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최진욱 외	공저	6,500원
2004-17	동북아공동체의 행정조직 구축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조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윤종설 외	공저	5,000원
2004-1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4-1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방안	전재경 외	공저	8,000원
2004-2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이진국 외	공저	6,000원
2004-2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김이선 외	공저	8,500원
2004-2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윤철경 외	공저	10,000원
2004-23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실태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4-24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 I ) : 잠재력과 장애요인	박기홍 외	공저	6,000원
2004-25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 I )	김광역 외	공저	4,000원
2004-26	종합결과보고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김광역	저	4,500원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II)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9,000원
2005-08-01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 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 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3-01	중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망: 10기 전인대 1차회의 결과분석		신상진
2003-02	북한 핵문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임강택
2003-03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임순희
2003-04	한미 정상회담과 공조방향		이현경, 박영호
2003-05	일본의 안보개혁과 유사법제 정비		배정호
2003-06	북한 병력제도 변화와 병력감축 가능성		박형중, 정영태
2003-07	11기 1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동향 분석		박형중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실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곤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CU)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윤,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 I ) :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II) : 부시 공화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전회 결과분석	전병곤
2004-20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4-21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전병곤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윤,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근,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윤,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향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명: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윤,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례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근,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렬

## Studies Series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정세분석보고서」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므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므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 회원가입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근 무 처				
	직 위			
간 행 물 받을 주소	(우편번호 : )			
연 락 처	전 화		FAX	
	전자메일			
	ID		PW	
전 공 및 관심분야				
회원구분	일반회원 ( ) 학생회원 ( ) 기관회원 (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정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절  
취  
선

- ※ 본 신청서를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FAX: 901-2547)
-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 (예금주: 통일연구원)
- ※ 본 연구원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어떤 서비스를 더 제공했으면 좋은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본 신청서 뒷면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